

제429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1일(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상정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1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1

(10시07분 개의)

○소위원장 위성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행안위 소관 기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대체토론이나 서면질의에서 제기된 시정요구사항이 없는 진실·화해 및 이태원 특조위 소관을 의결하고 다음은 행안부차관, 행안부 재난본부, 경찰청, 인혁처, 선관위, 소방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소위 심사자료를 토대로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입장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시정요구 또는 부대의견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시정요구는 그 유형도 추가로 결정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으로 구분되며 예결위에서 시정요구별로 시정요구유형을 한 개씩만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소위원장 위성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제2항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상교 사무처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 송상교입니다.

평소 저희 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성곤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진행 과정에서 충실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감사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이나 서면질의를 통해 시정요구나 부대의견을 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결산은 시정요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 관계자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태원참사 특위도 마찬가지로 서면질의 들어온 게 없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진 사무처장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박진 10·29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 박진입니다.

평소 저희 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성곤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저희 위원회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했으나 위원회 출범이 지연되면서 예비비 편성 과정과 집행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원 특조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이나 서면질의를 통해 시정요구나 부대의견을 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

했습니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정요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원 특조위 관계자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박진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행안부차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민재 차관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입니다.

행정안전부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1번 및 4번 디지털정부혁신실 안전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번 및 3번 안전은 제기하신 위원님들께서 철회하셨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1번, 일반회계 지능형 서비스 확대 및 운영(정보화) 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계획과 달리 실제 용역이 2025년 1월에 발주되고 국민권익위원회 3만 건 및 세종특별자치시 15만 건의 기초데이터만 확보하여서 학습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다른 AI 모델과 비교해서 사업의 실효성도 저하되는 측면이 있다는 문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공공 분야 인공지능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집행 부진 및 불필요한 추가 지출 소요 발생을 방지하고 사업 효과도 당초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주문으로 시정요구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제안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는 김성희 위원님과 이달희 위원님과 이성권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건인데요, 저희가 소위 자료를 다 배부해 드린 이후에 이달희 위원님과 이성권 위원님께

서 제기하신 문제를 철회하셔서 자료 정리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중에 동그라미 3개가 있는데 동그라미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이달회 위원님과 이성권 위원님께서 제기한 문제로 삭제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정요구유형도 관련해서 제도개선이 삭제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 대상기관에서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없는 곳으로 보시면 되겠고, 시정요구사항 주문에서도 개선 방안 문구는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희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한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면, 지적사항 가운데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최근 5년간 행정안전부의 경영실적평가 기준 총인건비 인상률을 초과한 인건비 인상 단행 및 이사회 미보고, 인건비 산출근거 임의 변경, 2024년도 성과연봉 지급률을 편성예산보다 높게 지급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감사원 및 자체감사에서 행정안전부 수탁사업의 불용·이월액 미반납, 휴직자에게 인건비 지급,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총인건비 한도 미준수 등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사·동일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향후 관련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주문으로 시정요구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1번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주의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번에 대해서도 주의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시정요구유형 구분 책 자료가 있는데요,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제도개선은 법령 또는 제도에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경우. 주의는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시정은 위법·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추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 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징계는 법령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상은 고의적 또는 중대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재산에 금전적으로 손실을 입히는 경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참고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동진 위원 차관님한테 여쭙습니다.

1번 디지털정부혁신실에 어느 정도 인력이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디지털실예요?

○고동진 위원 예.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한 200명 수준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런데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 ‘공공분야 인공지능 정책수립 제도 운영 관련해서 데이터 수집·분석하고 학습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AI 모델 개발용 데이터 구축 및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런데 한 200명 중에, 이 일이 굉장히 큰일인데 애시당초에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잡은 건지 아니면 그냥 여기저기서 전부 AI 그러니까 잡아놓은 건지 그냥 솔직하

게 얘기를 한번 해 봐 주세요. 모르시면 모른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 부분은 위원님, 디지털실은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걸 합쳐 모두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 말씀드린 지능형 서비스 확대 및 운영은 민원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AI를 도입하기 위한 업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새 정부 들어서서 과기부, 산업부 또 행안부, 범정부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도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주의 이걸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 행안부에서 지난번 전체회의 할 때도 AI 중심의 행안부로 바꾸겠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범정부 공공 AI입니다.

○**고동진 위원** 범정부 공공……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저희는 정부 내의……

○**고동진 위원** 그래서 이 자료 내용만을 보면 지금 AI 수석도 생겼고 거기하고 이렇게 얼라이(Ally)는 돼 있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부 내에 이제 각종 AI가 들어오는 부분은 행안부가 총괄 조정해서 가는 것으로 협의되어 있고요, 산업 파트나 이런 데는 산업부하고 또 R&D 분야는 과학기술부 중심으로 가고 있고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주의 주신 것은 저희가 작년에 범정부라기보다는 민원 처리 같은 경우도 반복이나 지속적인 거는 AI를 좀 도입하면……

○**고동진 위원** 지나간 것을 저도 그렇게 굳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앞으로……

○**고동진 위원** 우짜냐하면 이게 내년에 예산이 투입되는 거니까 잘해야 되니까.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 부처의 AI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라든가 이런 것은 행안위가 중심이 된다, 클리어하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많이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각 부처에서 AI 관련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도 행안부는 전부 알고 있고, 같이 다른 부서하고도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협업하고 그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오케이.

그러면 우리 행안부가 중심이 돼서 다른 부처를 지원하고 같이 엮어 주고 또 가이드를 해 주고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맞습니다. 다만 식약처라든지 이렇게 특수한 파트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만 되는 거는 그쪽에서 전담하고 우리는 범정부 공용으로 가는 것,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해 나갑니다.

○**고동진 위원** 식약처 그런 곳도 아마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못 할 거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과기부라든가 이런 데서 또 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요청드리려고 그러는 건 뭐냐 하면, 도와 드리려고 그러는 거니까……

행안부에서 정부 각 부서에 AI를 어떻게 지원하고 하나에 전체를 묶어 가지고 운영을 할 건지 그 계획이 잡혀지면, 제가 보기에 거의 잡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200명이라고 하는 인력에게 소화가 될 수 있는지가 일단 궁금해서, 그 일의 범위는 뭐고 어떤 사람들

이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좀 자료화해 가지고 저희 의원실하고 한번 회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보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여기서 주의 나온 것을 제가 건드리고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일단 내용 자체가 너무 모르고 만든 내용 같아서 한번 좀 같이 보고 우리 국회에서 지원을 해 드릴 건 뭔지 그것을 내가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자료 준비를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거는 어쨌든 작년에 저희가 관련돼서 집행했던 것에 대해 위원님들이 지적 주신 것에 대해서만 답변드린 거고요. 내년도 할 것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올해부터 할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알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제가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광희 위원 청주 서원구의 이광희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이번에도 주의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이전에 또 이와 관련된 수탁사업에 대한 불용이나 이월액 미반납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주의를 받은 적이 있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여러 가지, 시정요구사항 4쪽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과도하게 운영됐다라는 감사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감사하면 감사 처분요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모두 다 조치를 했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광희 위원 작년에 감사 요구한 게 이루어져서 감사가 됐던 모양이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광희 위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불용이나 이월액 미반납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주의를 좀 강력하게 해서, 제가 2년째 여기 오고 있는데 이 얘기를 지금 두 번째 또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광희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위성곤 다 질의하셨나요?

제가 추가로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AI 관련해서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지요, 사실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서 차관께서는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공공에서 생산하고 있는 데이터가 AI가 인식할 수 있는 파일로 저장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돼 있지 못한 상황 안에서 사실은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앞으로 AI정부위원회를 만들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부 문서를 어떻게 AI가 이해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1번은 주의 그리고 4번은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5번부터 7번까지 일괄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5번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지연되면서 일부 지역사업의 예산이 수시배정을 거쳐 연말에야 교부되어 대부분 미집행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이 조속히 배정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주문으로 시정요구하시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제안하셨습니다.

다음, 6번 사항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고향사랑기부금 접수를 위한 공공플랫폼인 고향사랑e음 시스템과 관련해서 유지관리비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부수익의 일부로 하여금 부담케 하고 있는데요.

2024년도 기부금 수익등급이 D 이하인 51개 자치단체의 경우에 수익금의 10% 이상을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분담하게 되어서 기부금의 당초 취지인 지역 경제 활성화나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게 된다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고향사랑e음 유지관리비가 기부 모금액 대비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주문으로 시정요구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안하셨습니다.

다음, 7번 사항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지역 특색을 반영한 기금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컨설팅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행정안전부는 지역투자계획 수립 지원 컨설팅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사업 성과가 나타나도록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주문으로 시정요구하시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안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5번, 주한미군 공여구역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주의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6번의 지자체 고향사랑e음 관련해서도 제도개선 의견을 주셨는데 수용하겠습니다. 또 7번의 지역투자계획 컨설팅 관련해서도 제도개선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8번부터 10번까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번 사항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역 고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으나 기존 국고보조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분산적·단발적으로 추진되어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기금의 신설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주문으로 시정요구하시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9번 사항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역시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인구감소관심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 부진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또 기초지원계정의 경우 실집행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기금 배분액을 감액하는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 사례는 없는 등 성과관리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문제와 함께 기초지원계정은 투자계획서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광역지원계정은 평가 없이 배분되고 있어서 차등 지원의 취지가 약화되고 중복 투자 사례가 확인된다는 문제점과 또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된 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이 명확한 근거 없이 정산 후 기금운용 주체에게 반납되지 않고 재투자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되고 있는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실집행 관리를 강화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실집행 부진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초지원계정 감액규정의 합리적인 적용기준 마련과 광역지원계정 운용방식의 구체화 등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교부 절차를 개선하며 성과관리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주문으로 시정요구하셨는데 김성희 위원님과 한병도 위원님으로부터 제안됐는데 시정과 제도개선으로, 두 가지 시정요구안으로 제안하셔서 한 가지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행정안전부는 기금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관한 보다 합리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할 것이라는 주문으로 제도개선 유형으로 시정요구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 10번 사항입니다.

역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사업입니다.

2024년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출자 대상으로 선정된 5개 지역개발 프로젝트 중 4개 프로젝트에서 자펀드 결성이 지연되고 있어서 출자금의 집행률이 저조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자펀드 결성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결성시한 준수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위탁운용사가 선정·취소되는 경우에도 자펀드 결성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관리 수단을 마련할 것이라는 주문으로 시정요구되었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안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8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 개선 필요와 관련해

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제도개선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또 9번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관리 강화 필요와 관련해서는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요구사항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자금 운용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집행을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의견을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번,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자펀드 결성 촉진 필요와 관련해서도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의견을 주셨는데요, 제도개선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집행률이 어떻고 이거는 차치하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2022년 한 9월 이때부터 집행이 돼서……

○서범수 위원 한 2~3년 지났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22년도는 하반기에 늦게 돼서……

○서범수 위원 매년 1조씩 들어가는 거지요, 한 10년 계획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런데 22년도는 늦게 시작된 바람에 7500억만 했습니다.

○서범수 위원 이거 혹시 효과성 나온 게 있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저희가 연구용역이나 이렇게까지는 아직 평가하지 못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이 효과성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 이 사업 목적이 좀 퇴색된 감이 있다. 그냥 국고보조금의 하나로 형식화되어 버렸다,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그것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효과성과 관련해서 혹시 나온 게 있으면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아직까지는 개별적으로 자체로 있고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효과성을 한 자료는 아직 없는데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예, 그것을 좀 보고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박정현 위원 저도……

○소위원장 위성곤 예.

○박정현 위원 지역소멸대응기금은 지난번 우리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서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실제로 지역소멸대응기금의 사용 용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효적인 효과는 안 나오고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데 또 매칭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매칭이요?

○박정현 위원 예, 일정 부분 지방정부가 약간은 매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매칭 규정은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박정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대개 회관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쓰여지고, 그게 무슨 체육관을 만든다고 사람이 그 체육관 보고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데 규정상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규정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맞습니다. 법에……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거 제도를 개선해 주지 않는 한 평가를 해도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거 제도개선이 지금 굉장히 시급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맞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법에서 기반시설 등에 투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귀속이 돼서 건물 위주로만 하게 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너무 적고요. 그래서 지금은 운영 규정을 바꿔서, 등이 있는데 사람이나 소프트웨어 정도의 운영 프로그램에도 투자할 수 있게끔 지침은 바꿔 드렸고요.

지금 또 개정법안을 내서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이 끝난 게 집행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평가를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더욱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이 부분은 정식으로 연도별로 보면 23년, 24년, 이제 겨우 2년 해 본 거니까 2년을 평가해서 하는 걸로 해서 행정부가 원하는 대로 제도개선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예, 제도개선 요청……

○이광희 위원 이광희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고동진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먼저 하시겠다고 하셔서.

○고동진 위원 지방소멸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취지를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런데 근본적인 방법은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 위주로 가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행안부가 산업부라든가 다른 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뭔가 그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산업이라든가—산업 규모가 크든 작든—이런 것을 끌고 들어올 수 있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하지만, 물론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을 행안부가 혹시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전반적으로 하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조거든요. 그런데 1조를 2500하고 7500으로 나눠서 2500은 시도 광역으로 드리고 7500은 89개 시군구 플러스 18개의 인구감소관심지역이 있습니다. 그 108개 시군구에 나눠 주다 보니까 평균을 내면 1개 시군 단위에 한 72억 정도밖에 못 갑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 결과로밖에 도출이 안 되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래서 여기 보면 10번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자펀드가 뭐냐 하면 광역에 가는 2500억 원 중에 시도가 1000억을 투자하고요, 그다음에 산업은행이 1000억을 내고 그렇게 해서 3000억 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금으로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 한 500억 정도 해 가지고 아니면 많으면 한 2000억까지 투자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한 5개 사업이 추진돼서, 11쪽에 보시면 충북 단양, 경북 구미…… 전남 여수 묘도터미널은 1조 4000억짜리거든요. 이 사업이 좀 내실 있게……

○**고동진 위원** 그런데 그것도 뭐 지금 계속 자펀드 구성이 안 돼 가지고 일정이 계속 딜레이되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이 8번 항에 대해서는 이러면 이게 자꾸 국민 세금이 그냥 엉뚱한 데로, 전시행정으로 쓰이는 결과가 되니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것 확실하게 하려 그러면 아예 그쪽으로 통폐합을 해 가지고 지방소멸되는, 인구소멸되는 지자체에 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해야지 이렇게 해서 전부 쪼개다 보면 1~2억, 몇억 이게 세금이 뒤로 물 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밖에 더 하겠어요?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애초에 만들어졌을 때는 A등급부터 D등급까지 해서 A등급에 대한 아이디어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주고 그렇지 못한 데는 안 주거나 적게 주고, 이런 차등이 없어지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다 똑같이 108개에 나눠 주는 바람에 이렇게 됐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다 똑같진 않고요.

○**이광희 위원**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1조를 원래 다 분산해서 배치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따로 1000억씩 빼 가지고 9000억 맞추고 나머지 1000억은 다시 펀드를 만들어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와 관련된 집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주신 자료에는 퍼센트가 없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국은 이게 옥상옥의 조직을 계속 만들고 애초에 의도했었던 대로 지역소멸대응기금이 마련되지 못한 결과물이고 행안부에서도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1000억씩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이런 것 아닌가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현황 보고를 저한테 해 주시면 좋겠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광희 위원**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설계가 다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10조를 만들고 1조씩 10년간 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역할을 하라고 만들었다가 지금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꾸 이걸 꺾고 꺾고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 돈을 쓴다고 하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쓰고 난 이후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평가가 돼서 실제로 살아난 데가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세 번 지급하고 나서는 살았다고 생각하는 데가 108개 중에서 몇 군데라도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 거의 모든 전 지역이 돈을 투자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단체장이 마중물이 아니라 그냥 원하는 데 갖다 쓰는 거지요, 자기 공약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 가지고는 통제가 안 될 뿐만 아

나라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물 새는 바가지처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고민을 해 주시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운영과 관련돼서 저에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관련해서 투자펀드인 경우는 지난번 결산심사에서 관련되어진 법률 근거를 확보하라고 했는데 근거가 확보됐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직 법안 통과가 안 됐고요.

○소위원장 위성곤 아직 안 돼 있고.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래서 활성화펀드 진행이 조금 지연되는 측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위성곤 두 번째로, 이 법안이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듯이 일반 국비처럼 사용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소멸기금이 어떤 특성을 갖고 일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원칙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다 가능하면 이걸 뭐 하러 기금에 놔둬니까? 일반 사업비로 편성해서 쓰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쓰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앞으로 관련해서 의논을 하도록 합시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소위원장 위성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정부가 수용한 대로, 요청한 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부터 13번까지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11번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교부금이 전액 교부되지만 실집행률이 저조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집행관리를 소홀히 하여 실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검토 없이 보조금의 전액 교부를 지속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과 재발방지책을 모색할 것이라는 주문으로 시정요구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다음, 12번 사항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마을기업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마을기업 지정 취소가 매년 반복되고 있고 마을기업 1개당 상용근로자 수도 정제되고 있어서 재정사업 성과지표상 성과가 미흡한 문제를 지적하시고,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지정의 고용 측면에서의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주문으로 시정요구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안되었습니다.

13번 사항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의 집행잔액 일부가 절차상 하자로 이월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납 처리되지 않아 정산이 2025년 4월까지 지연되었고 당초 이월액에 의해 충당하고자 하였던 2023년 지출소요가 결국은 2024년 예산으로 집행됨에 따라서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향후 이월

이 승인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적기에 반납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이 명확한 근거 없이 보조사업자인 지자체에 유보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 방식을 시정할 것이라는 주문으로 시정요구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11번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실집행 부진 관련해서는 제도개선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마을기업 고용 성과 제고와 관련해서도요 제도개선 시정요구사항을 주셨는데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관련해서도 보조금 관리 방식에 대해서는 시정 의견을 주셨는데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11번에 보면 제도개선 하시겠다는데 이게 지금 계속 실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어떻게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사실 이 부분은 행안부는 조금 억울한 입장도 있습니다. 이게 자율계정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부산시가 이 사업을 꼭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반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집행률이 적은데도. 이게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사업이긴 한데요, 저희가 앞으로는 신축하는 그런 사업, 예를 들어 10억 원 이상이나 이런……

○서범수 위원 그런 데는 예산을 안 줘 버리면 되잖아요, 빼 버리면 되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닙니다. 이게 자율계정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메뉴판이라고 하는 사업에서 부산시가 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거의 100% 자율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서범수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래서 저희가 대규모 신축 사업인 경우에……

이게 부산시에서 유희공간 같은 것을 활용해서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겠다는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아마 사전협의 같은 것을 함에 있어서 동의를 못 구해서 집행이 늦어진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현장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이것 집행에 오래 걸리지 않겠냐라고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패널티 조항을 만드세요, 이것 제도개선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게 되면지역자율계정은 자율성을 극대화시켜 준 건데 행안부가 관여한다고 다음에는 또 저희가 지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의견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위성곤 자율계정으로 사용되어진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게 되어지면 반납하게 됩니까, 아니면 다시……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1회 연도에 대해서는 이월해 갖고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반납도 안 됩니까, 집행이 안 되면?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어차피 이게 이월을 해서 다음해에 이 사업은 계속 하겠지요.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할 경우에는 반납할 수 있는데……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몇 년까지 이월이 가능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하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사업은 계속하는 것으로, 2 회 계연도까지 이월……

○**소위원장 위성곤** 관련되어서 자율계정 설정과 관련되어진 지침을 마련하실 때 관련 부분에 대해서 주지를 시켜서 집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달희 위원** 12번 마을기업에 관련해서 관련 법이 이제는 우리 행안……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통과됐습니다.

○**이달희 위원** 산하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기재부의 반대에 의해서 25년도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고생을 하셨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없었습니다.

○**이달희 위원** 제가 분석한 결론은 마을기업의 유지율이 어느 창업보다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높습니다.

○**이달희 위원** 85% 가까이 5년 유지하는 게 마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실효성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확보하셨어요, 지금 올라가 있는 게? 이게 예비 마을기업 하고 법 취지에 맞으려면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 관련 법이 없어서 기재부로부터 관관이 예산 확보가 안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닙니다. 반영됐습니다, 53억.

○**이달희 위원** 그 정도 가지고…… 예비 마을기업 지역에 내려가 보니까 예비 마을기업 지정받기 위해서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노력하고 있던데 굉장히 예산이 작은 것 같네요, 그 성과에 비해서.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어쨌든 반영된 걸로 해서 저희가 성과…… 지금 여기 제도개선 지적 주신 것도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이시니까 저희가 이제 법률적 기반을 갖고 성과를 제고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더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사회적기업이랑 또 여러 부서에서 하는 그런 사회적경제기업들과 비교해 보면 마을기업이……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높습니다.

○**이달희 위원** 오히려 높거든요. 거기에 설득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저희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김성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차관님, 말씀 그렇게 하시는데 지난 5년 동안 2명 고용을 못 했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을기업 하겠다는 사람하고 자기 아는 사람 한 사람 정도 해서 일을 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 평균적으로요?

○**김성희 위원** 예, 평균으로. 평균이 이렇다는 얘기는……

제가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지역에 가서 마을기업 하는 사례 봤는데 20명 넘는 분들이 해당 지역에 감귤을 가져다가 여러 가지 상품들도 만들고 판로를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하면 사실상 혼자서 자가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그냥 놔두고 있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법을 바꿨으니까 제도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한 20명에서 한 두 명이고 마을기업이 1800개가 넘거든요, 평균이니까. 그걸 보면 고용 규모는 위원님이 보신 것보다 더 많을…… 1800 곱하기 1명만 해도 1800명이죠 않습니까. 2명 하면 3600명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은 잘 보시면 그 지역에 거주하시고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제주도도 가 보고 얼마 전에도 해남에 가 봤지만 고용층 연령 자체가 이사라고 하는 분들은 90세부터 계시고요. 젊은 사람들이 다 제 나이 정도 되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도 꿈과 희망을 갖고서…… 큰 이익을 벌겠다라는 게 아니라 상호부조, 상호협동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효율성이나 영리성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행안부만큼은 여기를 좀 더 지원해 주는 게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차관님, 1명 고용해서는 공동체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니, 그러니까 한 20명 있는데 거기에 하나가 더……

○**김성희 위원** 아니, 20명 있는 데는 나머지 40개가 1명씩 고용해야 평균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20명 고용한 마을기업이 하나고 그다음에 1명씩 고용한 마을기업이 20개면 이걸 합치면 평균 2명이네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니지요. 20명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씩 더 추가되니까 21명씩 된 게 평균…… 추가 고용된 게 이렇단 얘기입니다.

○**김성희 위원** 그렇게 해서 제대로 성과가 나오게 될까요, 과연?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어쨌든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추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개수를 보면 늘고 있지 않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원이 없어서……

○**소위원장 위성곤** 마을기업이 늘고 있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기업에 비해서 사실 지원이 많이 부족하지요, 인건비 보조도 안 해 주고 마을 스스로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기업 전체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고려됐으면 좋겠고 시정요구안에 그 내용을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정부가 동의한 의견대로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14번부터 16번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14번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지방교부세 사업인데요.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세수결손이 예상되자 세입경정 없이 약 2.2조 원이 미교부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이와 같은 미교부는 지방교부세법 제5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행정안전부는 2023년, 2024년과 같이 국세수입 결손을 이유로 세입경정 절차 없이 임의로 지방교부세를 미교부하는 집행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주문으로 시정요구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과 용혜인 위원님, 이달희 위원님께서 각각 시정요구하셨고 시정과 제도 개선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제안이 있어서 한 가지로 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15번 사항입니다. 특별교부세 사항인데요.

2024년 특별교부세가 예산현액 1조 8500억 중 45%에 해당하는 금액이 수시배정 예산으로 지정되고 또 수시배정 예산의 한 87%가 11월 말과 12월 말 사이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계획적인 예산 운용을 할 수 없다라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행정안전부는 특별교부세의 수시배정 지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교부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주문으로 시정요구가 되었습니다.

당초 이달희 위원님께서도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를 하셨는데 동 사항을 철회하셔서 용혜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정요구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16번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지역경제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중 배달료 지원 사업과 관련한 건데요.

배달료 지원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실수요를 면밀히 산정하지 않고 예산을 계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을 교부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실집행률이 32% 정도로 저조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문제를 지적하시고 또 중소기업부도 배달료 지원 사업과 유사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복성이 없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행정안전부는 향후 착한가격업소 지원 시 업소 수, 중소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다른 기관들의 유사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여건 등 지원의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사실들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것을 주문으로 시정요구하셨는데 권칠승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님께서 각각 제안하시면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두 가지 유형이 제안되었는데 한 가지로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안)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통합 논의 시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교육제도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한다라는 주문으로 박수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14번 세입경정 없는 지방교부세 미교부 시정은 시정 또는 제도개선 의견을 주셨습니다. 가급적 제도개선 의견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용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15번 특별교부세에 대한 수시배정 지양 필요도 시정 의견 주셨는데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번 사업 추진 전에 실수요라든지 또 타 부처 사업 유무 등에 대한 검토를 해서 추진하라는 말씀 주신 것도 저희가 수용은 하겠습니다. 주의 또는 제도개선 중에 제도개선으로 정해 주시면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대의견 관련해서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다 하셨나요, 부대의견까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수용하겠습니다, 부대의견.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차관님, 이것 지방교부세 주지 말자고 아이디어 누가 내셨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재정 당국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걸 왜 모르세요? 아니, 그거 모르시면 안 되지요. 행안부 내에서 얘기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당시 해당 부서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결정된 걸로……

○김성희 위원 그렇게 두루뭉술 안 넘어갈 건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확히 누가 제안해서 이렇게 됐는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동네에서 돌아다니면 이것 아시겠지만 대부분 예산의 80% 정도는 고정비라서 시장이 쓸 돈이 없어요. 그런데 4/4분기 가 가지고 돈 못 주겠다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깎아서 쥐 버리면 지방자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예산을 쓸 수가 없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책임자가 없고 그냥 기재부랑 행안부랑 이렇게 저렇게 상의했다라고 하시면……

제가 누가 했는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대충 말씀해서 넘어갈 생각이 전혀 없는데, 정리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 놓고 제도개선을 한다고 하니깐 저희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도개선은 무슨 제도개선,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국회에다 추경 요구 안 하고 자기들끼리 깎을 거잖아요. 정부가 이럴 권한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니,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위원님.

○김성희 위원 아니, 계속 요구를 했는데 계속 그렇게 해 오셨잖아요, 작년, 재작년. 민주당이 추경 요구할 때마다 거절해 오신 행정안전부가 이제 와서 앞으로 제도개선을 하면 봐주겠다는 얘기를 그거 누가 듣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금년도 추경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김성희 위원 금년도 추경은 그렇게 안 했겠지요, 지금은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지금 행정안전부에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여당이고 야당인 걸 떠나서.

그리고 누가 이렇게 해서 지방재정을 마음대로 깎아서 지방자치단체를 괴롭게 했는지, 곤혹스럽게 했는지에 대한 진상도 밝히지 못하는 행정안전부가 지금 시정요구도 못 받아들이겠고 제도개선으로 하면 유야무야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듣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닙니다, 위원님.

○김성희 위원 저는 이걸 시정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세입경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냥 집행해 놓고 내년에 또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놔두면 천년만년 계속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시정 아래로는 절대 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시정 의견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시정으로 가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그것도 수용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김성희 위원 그리고 누가 이렇게 했는지 정확히 진상을 조사해서 의원실로보고해 주세요.

○소위원장 위성곤 시정으로 하시고요, 14번은.

○김성희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차관이 답변을 안 하는데요.

○소위원장 위성곤 답변했습니다.

○김성희 위원 아니, 제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그 부분은 부서에서 검토를 했고 결정은 그 당시 행안부를 이끌었던 분들이 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어떤 개인이 그렇게 했다고…… 행안부의 입장으로 나왔던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김성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나 조사를 해 보셨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차관님, 행안부 입장에서 관련된 조치가 법률을 위배했다고 판단합니까, 법률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까, 현재의 행안부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게 행정안전부가 그냥 한 건 아니고요.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는데 저는 그 당시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앞으로는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추정이라든지 이렇게 조정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저는 이게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불법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이미 저희 의회에서는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요. 그런데 2024년도에 그대로 진행을 하신 거지요. 그러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적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그 부분을 시정요구안에 넣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걸 담아서 시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없으시면 15번, 16번, 부대의견까지 행안부가 의견 한 대로……

○박정현 위원 16번은 주의, 제도개선이 같이 있는데……

○이광희 위원 위원장님, 부대의견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위성곤 부대의견이요?

잠깐만요.

행안부는 15번 시정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16번은 제도개선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대의견 관련해서 이광희 위원님께서 부대의견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린다고 합니다.

○이광희 위원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기관 평가 및 지방소멸 대응 목표에 맞는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실시한다’를 부대의견으로 제안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마련하여 위원회로 예산심사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에 ‘예산심사 전까지’는 안 넣겠지만 관련해서 예산심사 전까지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법령을 또 개정해야 되는 측면도 있으니까요. 그 방향 이런 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일반 국비와는 다른 방향의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일반 국비로 다 하고 있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관 소관 관련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이런 속도로 가면 오후에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당히 속도를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음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광용 본부장께서는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평소에 잘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들도 저희가 잘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1번부터 5번까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소위 자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결산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요일에 송부해 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14건, 시정요구 11건, 부대의견 3건이었는데요. 그 시정요구사항 중 1건이 철회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10건, 부대의견 3건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6번이 철회되었습니다.

1번에서 5번까지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반회계 재난안전산업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 사업은 재난안전제품에 대해서 적합성 인증을 하는 사업인데 예산현액 5억 22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재난안전제품의 경우 정량적인 인증기준이 없어서 재난안전제품의 성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용혜인 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제품의 품목별로 정량화된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등급화를 통해 제품의 성능을 명확히 표기하는 등 재난안전제품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번, 일반회계 지역안전개선 컨설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안전취약지역시설개선모델 실증사업은 지역의 안전수준 진단 및 위험 분석을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0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3년 지역안전지수 산정 결과와 24년 선정된 사업대상지의 사업 유형을 비교해 보면 안전지수 산정 결과와 무관한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공모 형태의 국비보조사업인데 낮은 등급의 안전지수를 받은 지역이더라도 지방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 동 사업을 신청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양부남 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안전지수가 낮더라도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 참여를 주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없도록 사업비 보조율을 높이는 등 제도개선에 노력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3번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보강 사업은 재난안전 분야 개별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은 용역 수행 기간이 12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4년 8월 1일 계약 시 예산의 과반을 초과하는 이월을 예상할 수 있었던 사업입니다.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미흡하여 실집행 이월이 과다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성권 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보강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 관리를 할 것, 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4번 사항입니다. 지능형 CCTV 관제체제 구축 사업입니다.

동 세부사업은 실영상 기반 학습데이터플랫폼 및 재난 분야 AI 알고리즘 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4년 예산현액 32억 51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학습데이터를 제작 및 배포하여 각 지자체의 지능형 관제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것인데 각 지자체가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학습데이터 활용을 통한 지능형 관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김성희 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의 지능형 관제체제 구축 지원 목적으로 제작·관리되는 학습데이터의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것, 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5번 사항입니다. 동일한 지능형 CCTV 관제체제 구축 사업인데요.

동 사업에서는 정보화사업과 내용상 연관성이 있는 실증공모와 ISP를 동시에 추진하

었는데 일정상 실증공모사업보다 ISP가 먼저 종료되어서 ISP 수립 시 실증공모의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김성희 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향후 정보화사업의 ISP 수립 시 내용상 연관성이 있는 실증공모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ISP 수립 이전에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 완료할 것, 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다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수용합니다.

다만 지능형 CCTV 관제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두 번째 실증공모 결과를 ISP에 활용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 분류가 주의로 되어 있는데 혹시 가능하시면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제도도 바꾸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사항 중에 안전개선모델 실증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필요 부분에 있어서 행정안전부는 재정 당국과 협의를 통해 안전지수가 낮더라도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 참여를 주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없도록……

많은 전제조건이 있는데, 실제 조건과 자격이 안 되는데 하도록 해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렇게 좀 변경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취약지역시설개선모델과 관련해서 사업비 보조율을 개선할 것 이런 형태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지적하는 건 안전지수가 낮음에도 지방비 매칭 자금이 없어서 안전개선사업을 못 하는 지자체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보조율을 높이자는 취지가 아니고?

○양부남 위원 그러니까 보조율을 높이라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니까 보조율을……

○양부남 위원 돈이 없으니까 보조율을 높여 줘야지 하겠지요.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니까 보조율을 높이게끔……

그 안전지수가 낮는데, 행안부가 평가를 했을 텐데 평가를 해서 안전지수가 낮은 것에 대해서 지자체의 노력이 부족한 것을 격려하는 방식인 것 같아서……

○양부남 위원 안전지수가 낮더라도 지자체가 공모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못 하잖아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모를 하고 싶는데 재정 여건이 허락지 않으면 못 하니까 보조 비율을 높여 줘야 되겠지요.

○소위원장 위성곤 보조 비율을 높이는 데는 동의하고, 안전지수가 낮은 지자체를 포함시키라는 것은 저는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양부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보조 비율을 높이는 대상을 안전지수가 낮은 데로 한정하는 것에 좀 부정적이라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위성곤 예.

○양부남 위원 그렇지요. 안전지수가 낮은 게 어느 정도 낮아야지만 보조율을 높이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보조 비율을 높이는 걸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보조율을 높이는 것하고, 그리고 또한 행안부는 안전지수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지수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게끔 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저희는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고맙습니다.

○양부남 위원 이 사업의 보조 비율을 높이는 걸로.

○소위원장 위성곤 보조 비율 높이는 것과 안전지수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할 것 이렇게 넣어서, 오케이?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다음은 없으시면……

○고동진 위원 하나, 아까 4번의 학습데이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안부도 마찬가지로 인텔 지능형 CCTV 관련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자체가 보면 분명히 어디는 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대부분이 아마 능력들이 안 될 테니까 이걸 지자체에다 맡겨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좀 솔직히 잘……

자료는 없으니까 내가 모르겠는데 이걸 행안부나 직접 총괄하는 어떤 TF를 하나 만들어서 몇 개 지자체를 시범으로 해서 운영을 해 보고 석세스(success)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지자체에다 배분하는 게 답이지 지금 이렇게 전부 지자체별로 해서 개별로 움직이게 하는 건 아마 성과가 별로 안 나올 확률이 크다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님, 조금만 답변드리면 지금도 저희가 할 때 몇 개 시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을 해 보고 그걸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모델을 취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렇게 해야…… 그다음에 관련된 전문인력들이 여기, 왜냐하면 스타트업들이 여기 꽤 있어요. 그런 친구들 몇 개 끼워 가지고 사업을 한번 해 보면 결과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조금만 설명드리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수준은 사실은 사람을 인식한다든지, 거기서 쓰러지는 걸 인식한다든지, 집안에 들어가는 걸 인식한다든지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산불이라든지 침수라든지 이런 분야를 조금 넓혀 가면서 시범 지자체를 통해서 시범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모델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탑재돼 있는 CCTV나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들도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꼭 그렇게 하고 그 계획을 저희 의원실로 업데이트를 한번 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래요.

○김성희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는 눈으로 관제하는 걸 인공지능으로 해서, 지능형으로 해서 완전 대체할 계획이었던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저희가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식의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김성희 위원** 지원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유관 관제를 인공지능으로 바꾼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 예산을 세워 두셨다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지고 탐지도 잘 안 되고 착오도 생길 테니까 데이터를 주고 각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건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전 국력을 모아서 하나의 시스템을 도입해도 성공할까 말까 한 사업인데 그걸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맡겨 놓고 하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들이 무슨 수로 이런 걸 개발을 해서 집행을 하는지를 모르겠다 라고 말씀드린 건데……

지금도 말씀하시기에는 ‘그런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샘플을 받아서 뭔가 모델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 모델 만드는 데 7600억이 든다는 얘기에요? 지금 앞뒤가 잘 이해가 안 돼서……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제가 이해한 바를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체를 구축하는 데 한 7600억 정도로 그렇게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다만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소위원장 위성곤** 잠깐만요, 본부장님.

담당 국장이랑 과장 오셨지요? 사업 설명해 보세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 이세영**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앞으로 와서 앉으셔서 마이크로 위원님들께, 속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 이세영**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 이세영입니다. 제가 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태원 참사 이후에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라고 그 후속 대책이 마련이 되고 그중에 주요 과제로 지능형 CCTV를 전면적으로 교체하자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이후에 확인을 좀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CCTV를 지능형 CCTV로 교체하는 데 최대한 7600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이건 자치사무입니다.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탐이 잦다, 오탐이 너무 잦기 때문에 이걸 현 수준의 지능형 CCTV 기술로 그대로 가기에는 무리수다라는 지자체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내용을 변경하게 된 거고요.

그 변경된 사업 내용은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 당시까지 지자체도 그렇고 지자체의 의뢰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도 그렇고 실제 CCTV를 통해서 입수되는 실영상을 활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스튜디오 같은 데에서 불을 내 가지고 촬영한 그걸 가지고 개발을 하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영상 기반의 데이터플랫폼, 그래서 AI가 학습하기 좋은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결국에는 그걸 토대로 해서 기업들도, 지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타트업도 그걸 활용할 수가 있게 되고 영상분석 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지자체 사업에도

반영이 될 수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이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4개의 시군구를 지정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먼저 하고 내년 이후에 계속 확대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도입……

○소위원장 위성곤 잠깐만요. 시스템 개발이 완료됐나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 이세영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단계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데이터플랫폼만 만들면 지자체에 확산이 되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 데이터플랫폼을 만들고 나서 실제 각 기업들이, 스타트업이라든지 영상분석 기업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는 이용포털 같은 환경을 저희가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자체에는 저희가 지금 그 실증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증사업들을 또 제공할 해서 관심 있는 지자체에서 이걸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 지자체의 여건이 CCTV라든지 이런 기술을 적용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특별교부세에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선뜻 나서기 어려운 알고리즘, 침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쪽에서 직접 개발해서 보급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정책협의회를 만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라든지 각 기업들,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 시스템이 아무튼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혹시 질문 계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오늘 상황을 파악했으니까, 오늘은 결산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 하시고 다음 기회에 불려서 검토를 좀 하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시지요.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ISP도 마찬가지로 제도개선을 하시겠다는 생각인 거지요? 지금 이게 시범 적용을 먼저 하고 나서 ISP를 하는 게 맞았다고는 동의하시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할 때는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예.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철회 의견 있습니다. 검토 전에 바로 얘기할까요?

○소위원장 위성곤 아니요, 지금 이것 정리하고 나면……

어디 철회하실 게 있으세요?

○이달희 위원 6번.

○소위원장 위성곤 6번은 철회됐습니다.

○이달희 위원 예, 6번 철회하고 7번으로 넘어가시지요.

○소위원장 위성곤 잠깐만요, 아직 5번 종결을 안 지어서요.

5번까지 주신 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번 사항에 대해서는 부처에서는 제도개선을 요청했고 김성희 위원께서는 주의
를 요청했는데……

○김성희 위원 수용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소위원장 위성곤 제도개선으로?

○김성희 위원 예.

○소위원장 위성곤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 사항은 철회가 되었고, 7번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7·8번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진대비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사업은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의 내진보강공사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년 기준 30개소를 계획했는데 사업 수요의 절대 부족으로 8개소에 대해서만 지원이
확정되었고 이마저도 교부된 국비의 실집행 실적은 없다는 지적이 김성희 위원, 권칠승
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위한 사업을 재추진하
기에 앞서 사업 수요 확보를 위한 대안의 실효성을 검증할 것, 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8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급경사지 실태조사 사업은 전국적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 급경사
지를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 25억 원을 전액 집행하
였습니다.

24년 급경사지 실태조사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25년에 종료됨에 따라 차년도 재해
예방조치들이 시의적절하게 추진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이성권 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연도 급경사지 정비사업 계획의 기초자료 수
집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실태조사 결과의 신뢰성 및 적시성 확보 방안을 모색할
것, 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2건의 의견 다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9번에서 11번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재난대책비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재난대책비 지원 사업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과
공공시설 피해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은 24년 예산 대부분이 23년에 발생한
피해복구비의 지급을 위해 이연 집행되었고 그 결과 24년에 발생한 재난 피해에 대해서
는 대규모 이·전용 및 차년도(25년) 본예산 편성에 의해 부족 재원을 충당하였다는 지적
이 김성희 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재정 당국과 협의를 통해 당해 연도 피해복구비를 당해 연도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24년과 같이 전년도에 발생한 재난 피해의 복구비 등을 당해 연도 본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할 것, 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0번, 일반회계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은 풍수해보험 가입자 대상 보험료를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본예산 376억 31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3년, 24년에 걸쳐 제삼자 기부 가입자 및 일반 가입자에 대한 정부지원을 하향 조정으로 24년 소상공인 가입률은 6.5%로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정부지원율의 하향 조정을 통한 보험 가입자의 자부담 확대는 보험료 지원으로 인한 국가재정 부담의 누적적 증가에 따른 조치로써 24년 기준 국가의 민간 보험사에 대한 보험료 미납액은 515억 6800만 원으로 가입률도 저조하고 미납액이 크다는 지적이 권칠승 위원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등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면서도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책 수단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1번, 일반회계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은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대피시설 신규 구축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본예산 6억 4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최근 5년간 주민대피시설 실집행 현황을 보면 매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상당 규모의 실집행 이월이 반복되고 있는데, 24년의 경우 전체 사업 대상 2개소 모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해 실집행률이 3.1%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달희 위원, 이성권 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또한 15개 시군 전체의 민방위 대피시설 수용률이 432%로 높은 수준이지만 일부 접경지역의 면 단위 평균 수용률이 30.3%에 불과하며 이 중 대피시설이 없거나 인구 대비 10% 미만인 곳이 절반으로 그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등 집행관리를 강화하여 연례적인 실집행 이월 과다를 방지하고 사업 집행 지연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주민대피시설 구축 현황 재검토를 통해 연도별, 연차별 계획대로 해당 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웅 3건 다 저희들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9번 이연 집행에 따른 과다한 이·전용 지양과 관련해서는 설명만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재난 피해라는 것이 올해에는 내년도 재난 피해를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복구비를 편성하는 기준은 그 해에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은 그 해의 예산으로 하고 또 다음 연도에 해야 되는 것은 다음 연도 예산으로 해서 이월도 최소화하면서 복구도 제때에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이월이라든지 또 이·전용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되 또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 예산으로 이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여튼 자치단체의 불편함 없이 또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김성희 위원님.

○김성희 위원 9번 관련해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현 제도하에서도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그런다는 전제하에 철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다만 철회하면서 그런 의견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긴급지원과 관련되어서 행안부가 좀 더 조기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끔 정책 로드맵을 만들어서 관리할 것, 이 정도로 부대의견을 해서 제도개선으로. 괜찮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부대의견……

○소위원장 위성곤 부대의견 전에 민방위 교육훈련에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을 매해 하고 있는데 실제 집행은 잘 안 되고 보면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에 내용을 포함하든 별도로 하든 간에 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 것, 이렇게 시정요구를 제도개선으로 하고자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필요한 게 한 397개, 한 400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아직도 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쪽의 선호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니까 매해 몇 개소, 몇 개소 이렇게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375개소고 지금 현재 243개소가 되어 있잖아요. 한 100여 개소가 남아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시군구가 일괄적으로 계획을 마련해서 도 단위로 보고를 받고 보고받은 걸 가지고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지는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분들도 예측 가능하니까 충분히 수용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이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이게 지금 주민들께서 반대해서 그 시설이 안 되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수요 조사할 때는 좋다, 우리 동네에 하자 이

렇게 하셨다가 또……

○**이달희 위원** 제가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면 평소에는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쓸 수 있고 이런 어려운 위기 시에는 대피시설로 할 수 있는 복합물로 쓰면 서로 일치하지 않을까, 좀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아요. 혐오시설 비슷하게 막 이렇게 짓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 아닐까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지금 말씀 주신 거 저희들 잘 명심하겠습니다. 서해5도라든지 이런 데들은 지금 복합시설로 평상시에는 주민들 편의시설로 쓰고 또 위기 시에 쓰는……

○**이달희 위원** 접경지역에도 좀 그런 새로운 현대식의…… 평소에도 쓰고 또 위기 시에는 대피시설로 쓸 수 있도록 다시 설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대피시설은 지하에 설치하나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지금 주로 서해5도라든지 이런 데는 지하에 아니면 반지하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지하에 설치하는 거지요? 지하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달희 위원** 지하 아닌 데가 더 많습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서해5도 쪽은……

○**이달희 위원** 지상이 더 많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전부 다 지상입니까?

○**행정안전부민방위심의관 장한** 예, 맞습니다.

○**이달희 위원** 지하 아닙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보다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리모델링하게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운영 지원을 좀 하는 방식으로 고려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사업 내용을 한번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예,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부대의견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산업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 운영 외에도 재난 안전제품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인증된 제품의 사용실태 및 적절성을 점검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용혜인 위원님이 제안하셨습니다.

2번, 행정안전부는 승강기안전관리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율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심층적으로 점검·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서범수 위원님이 제안하셨습니다.

3번, 행정안전부는 재난대책비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과다한 이·전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 이성권 위원님이 제안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부대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님들 주신 의견 저희들 다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재난안전본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잠깐 계시고요, 차관님 들어오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우리 소위원회가 논의한 시정요구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찰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재성 차장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항상 저희 경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경찰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잘된 부분은 더욱 보완·발전시키고,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원인을 분석하고 진단하여 개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일반회계 세입 1번, 2번 및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입 1번 안전, 총 3건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경찰청 소관 결산 소위 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은 모두 1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일반회계 2건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건, 3건을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행위 또는 단속법 위반에 대한 질서벌로서 부과·징수하는 비목으로 2024년 징수결정액 2조 4064억 8200만 원 중 1조 3188억 8600만 원이 수납되고 1조 837억 3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38억 6100만 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었습니다.

매년 큰 규모의 과태료가 세입으로 결정되지만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매년 50% 수준이고 23년부터는 미수납된 금액이 1조 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 5년 이상 체납된

과태료는 963만 건이 넘고 금액이 6806억 원이라는 지적이 김성희 위원, 이달희 위원, 위성곤 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경찰청은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및 체납과태료 최소화를 위하여 교통 과태료 부과 체계 및 제재조치의 적절성과 대안을 검토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하거나 타 부처와 협력하여 불법차량, 체납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차량의 소유주와 운행자가 상이한 차량입니다. 불법차량의 적발 및 과태료 징수 수단을 모색하며 과태료 담당 인력의 업무 배치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 등 중장기적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 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번, 일반회계의 과태료, 동일한 사업입니다.

경찰청에서는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이 가까워진 과태료 건에 대해 시효중단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24년 46억 원, 6만 9000건에 달하는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지적이 위성곤 위원, 이달희 위원으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경찰청은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과태료의 소멸시효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입니다.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은 경찰병원 사업운영 관련 수입으로 24년 세입예산액을 317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241억 69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자 수 감소와 사업수입의 감소로 최근 3년간 일반회계에서 경찰병원특별회계로의 전입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4년 세입액 797억 1300만 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이 456억 4600만 원으로 재정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책임운영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김성희 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경찰청은 경찰병원의 사업수입 악화 및 국가 재정 의존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첫 번째 안전에 대해서 제도개선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력 등을 통해서 실효성이 있는 과태료 체납 관련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입니다. TCS 고도화 관련해서 이 부분도 제도개선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TCS의 고도화를 추진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과태료 수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찰병원 관련 제도개선 의견에 대해서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전담 경찰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됐고 또 전공의 파업 등 외부 여건 악화로 진료수입이 다소 부진하였습니다. 향후 수입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제가 할 말은 많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

○소위원장 위성곤 예, 서범수 위원님.

○**서범수 위원** 제가 2013년에 교통국장 했거든요. 차장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2013년에 교통국장 했을 때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서범수 위원** 제가 한 말 그대로 지금 차장님이 하세요, 십몇 년이 흘렀는데. 제도개선 어떻게 할 거예요, 과태료?

한창훈 국장님, 혹시 중고 매매, 차 팔 때 과태료 완납해야 됩니까, 지금? 아니지요?

○**경찰청생활안전교통국장 한창훈** 지금 차량을 정상적으로 처분할 때는 과태료를 완납해야 그게……

○**서범수 위원** 중고차에도, 매매상에도 진짜 그렇게 합니까?

○**경찰청생활안전교통국장 한창훈** 예.

그런데 지금 대포차, 불법차량들이 양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고거래상에서 명의 이전을 정상적으로 안 하고 처분해 버리는 경우, 그런 차량들이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의 체납이 증가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서범수 위원** 다음에 국감 할 때 이것 내가 집중적으로 물어볼 테니까 대비 잘 하십시오.

○**경찰청생활안전교통국장 한창훈**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예고편이었습니다.

과태료 이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방안이 지금처럼 50%밖에 안 된다면 끝까지 추진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할까요, 차장님?

○**경찰청생활안전교통국장 한창훈** 생활안전교통국장입니다.

저희가 계속 상습적으로 또는 장기 또 고액 체납 상태로 있는 차량들이 대부분 다 일명 대포차량이라 하고 불법적으로 운행이 되는 차량들인데……

○**소위원장 위성곤** 대포차가 세금을 1조 원 넘게 하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경찰청생활안전교통국장 한창훈** 예.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대포차량이 돌아다니는 차의 절반이라는 말씀인데 통계적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대포차 빼고 다른 방안. 대포차가 핑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차량의 절반이 대포차량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요? 대포차량은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는 겁니다.

○**경찰청생활안전교통국장 한창훈** 저희가 지금까지 징수 강화 대책으로 매년 수립해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또 현장의……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니까 인력적 말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이것을 과태료를 건넌다 이렇게 하는 방안 말고 당사자의 재산의 거래 과정 안에서 반드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떤 형태로 만들겠다라는 대안을 가져오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범수 위원** 고민해 가지고 갖고 오세요.

○**경찰청생활안전교통국장 한창훈** 예.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니까 대포차량은 핑계예요. 대포차량은 전체 차량의 몇 % 됩니까, 국장님?

○경찰청생활안전교통국장 한창훈 정확한 통계를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산정할 수는 없는데, 감으로. 50% 되면 경찰은 필요가 없는 거지요. 치안을 그렇게 유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대포차량은 전체 차량의 한 5%, 1~2% 정도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 이상을 가산하고 대답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고 관련해서 대포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실태도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알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대당 대포차량이 안 낸 게 한 500만 원, 1000만 원씩 넘어갈 거예요. 한 두 건이 아니고 수백 건, 수천 건이 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렇더라도……

검사님 말씀하시지요, 경찰에서 얘기했으니까.

○양부남 위원 과태료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안 되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금 압류라든지 변호관……

○양부남 위원 아니, 강제집행. 돈 안 냈을 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냐, 돈 안 낸 사람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못 하잖아요. 과태료에 못 하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금 압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강제집행 가능해요? 돈 안 낸 사람 집의 재산을 강제집행해 가지고 국가에서 돈을 가져갈 수 없는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차량 압류는 가능합니다.

○양부남 위원 차량은 가능해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양부남 위원 그러면 강제집행을 몇 %나 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태료 문제가 서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집행률이 나아지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태료 문제는 강제집행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경찰에서…… 우리나라의 과태료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반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도 있는데 경찰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전부 다 범법행위와 관련된 과태료가 많습니다. 형벌로 가기 어렵기 때문에, 형벌의 비형벌화가 현재의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로 전환한 내용들이 많아요, 실제로는 형벌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아이디어 차원인데 과태료에 대한 강제징수가 가능한 법을 경찰청에서 한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소멸시효 중단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어떻게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것입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다시 재독촉하는 형태로 해서 소멸시효를……

○양부남 위원 소멸시효 중단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볼 때는 국세청이나 세무서하고 업무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제징수할 수 있는 법안, 소멸시효 중단에 있어서 국세청과 세무서와 연계해서 방안을 강구하면 효율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알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국세청하고 한번 의논을 잘 해 보라고, 국세청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양부남 위원 그러니까, 노하우가 있지요.

○소위원장 위성곤 이것 경찰청이 못 건으니까 지방자치단체한테 전부 다 넘겨주면, 제주 보니까 다 찾아내던데…… 경찰은 이것을 담당하는 인력이 몇 명이 안 되지만 지자체에 주면 이게 돈 버는 수익 사업이니까 전 공무원이 다 동원해서 전부 감시하니까 실질적으로 가능하지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가 필요하다.

사실 지방정부에서 요구하고 있기도 하지요. 과태료를 지방정부로 이전해 달라고 요청하고 앞으로 자치경찰이 시행되면 아마 이 업무는 자치경찰로 다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주 상황을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런 검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알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제도적으로는요 제 아이디어 차원인데 과태료징수공단을 하나 만들어도 돼요. 과태료징수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과태료를 많이 건으면 거기에 나온 돈으로 공단 유지비용 충분히 충당하면서도 과태료 징수율은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적으로 조자룡 헌 칼 쓰듯이 검토하겠다는, 검토하겠다는 말만 번지르하게 하고 안 나오면 안 돼요. 획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도로교통공단 있잖아요, 도로교통공단 안에 어떤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달희 위원 지방정부에 주면……

○양부남 위원 아이디어 차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꼭 경찰이 지고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위성곤 교통 업무를 지방으로 일정 이전하고 과태료 업무는, 제주를 지금 지자체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찰청생활안전교통국장 한창훈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징수하고 있고 징수율도 훨씬 높고. 보면 그렇게 자치경찰이 만들어지면 아마 이 회계가 지방정부로 이전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검토까지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알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국장님, 제주도 징수 상황하고 평균하고 한번 해서 그 자료를 주세요.

○경찰청생활안전교통국장 한창훈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일반회계 세출 1번에서 3번까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기동순찰대 운영 사업은 23년 이상동기범죄 등에 대한 예방 순찰 활동 활성화 및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출범한 기동순찰대의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 예산현액 52억 3700만 원 중 50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12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기동순찰대와 지역경찰은 실질적인 업무에서 중첩되고 차별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윤건영 위원, 이달희 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경찰청은 기동순찰대와 지역경찰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기동순찰대의 운영에 따른 인력 재배치 및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성과 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한 후 운영 및 확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점검할 것,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번, 수사지원 사업입니다.

경찰관서 사건기록보관실 구축 사업은 경찰관서에서 생산한 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4년 예산액 95억 300만 원 중 90억 12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100만 원을 이월, 3억 3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강원 강릉서와 대구 달성서는 25년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이 있어 24년에는 구청사의 유휴공간을 임시로 기록보관실로 활용 중인데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향온향습기 및 모빌랙 구입비 1억 6100만 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2개 서 임시보관실의 사건기록이 향온향습기 없이 관리되고 있어 기록물 보존에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과 사전계획 수립 시 설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후 집행하지 못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달희 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경찰청은 향후 사건기록보관실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수요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보관실의 개·증축 및 보수, 기록 이전 등의 과정에서 수사기록 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3번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수사인권 및 피해자보호활동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 사업은 피의자 진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기 위한 사업으로 검거 건수 대비 영상녹화 건수로 측정되는 영상녹화 실시율이 21년 7%에서 24년 4.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는 지적이 용혜인 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경찰청은 영상녹화 실시율이 지속 감소하는 데 대해 명확하게 원인을 조사하고 원인 규명에 따라 실시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 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1번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순찰대 관련 현장 의견을 지속 반영하고 지역별 치안 여건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기동순찰대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안건 사건기록보관실 관련입니다.

이 부분도 제도개선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기록보관실의 유지·보수예산 편성·배정 시에 사전에 예산집행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불용이나 이월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녹화 실시율 제고 관련입니다.

이 부분도 제도개선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운영 현황을 매월 분석하고 또 활용률 저조 원인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해서 시스템 개선 및 수사관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해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3번 영상녹화제도가 실시된 게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사람과 수사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특히 인권보호 차원에서 한 것인데 이게 실시율이 계속 저조되는 원인이 뭘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실제 그 후에 영상녹음이 도입됐는데 영상녹음은 절차라든지 이런 게 좀 편리한데 영상녹화는 CD로도 제작해야 되고 이것을 또 편철해서 송부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실시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차세대 키스(KICS)가 이제 도입이 됩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의해서, 차세대 키스가 되면 파일을 등록하면 자동으로 송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실시율은 조금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아니, 지금 하신 말씀은 초기에 영상녹화가 실시될 때도 다 됐던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이 줄어드느냐 이것이지. 경찰은 그런 원인을 분석해야지. 지금 차장님께서 하신 그런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야. 영상녹화제도가 처음 실시될 때부터 똑같은 환경이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줄어드느냐 이것이지요.

그 원인을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수사관들이 수사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가 수사할 역량에 벅차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방금 말한 영상녹화에 부대되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은 초창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율이 떨어진 것은 뭐냐? 수사하는 경찰관들의 의지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왜 의지가 약해졌냐? 업무가 많아.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50밖에 안 되는데 60, 70을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업무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근본적 원인은 업무가 과다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것 필요합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요즘 사건 수도……

○양부남 위원 안 그러면 영상녹화제도의 의미가 없지요,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영상녹화제도가 인권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지면, 바람직한 것은 갈수록 실시율이 높아져야 됩니다. 이것 뒷걸음질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면밀히 진단해서 실시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2번 문제인데요.

제가 뭐 묻고 싶어서 이것을 넣었는데, 사건기록보관실에 주로 보관하는 게 페이퍼랑 또 뭐가 있습니까? 증거물 같은 것 다 보관하나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증거물은 송치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로 사건기록이 보관……

○이달희 위원 주로 기록이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이달희 위원 옛날에 병원에서 그냥 종이로 계속 보관하던 것을 법을 바꿔서 다 전자

화했잖아요. 여기도 지금 올해 예산 쓴 게 전체 한 59억 정도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이달희 위원 이 59억을 스캔 떼서 디지털화하면 되지 이것을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향온향습기·모빌렉 이런 것까지 다 갖추어 가지고 끌어안고 있어야 되나요? 스캔해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법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법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형사절차 전자화법에 의해서 앞으로 모든 서류는 전산으로 다 검찰에 송치되고 법원으로 기록이 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법 규정이 정비된다면 이제 이렇게 기록으로 보관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종이를 보관할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 59억을 차라리 일자리로 해서 다 스캔을 떼서 보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찾기도 쉽고 그럴 텐데……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달희 위원 이 아이디어를 제도화하는 데 연구 한번 해 보시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관계 부처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옛날에 병원도 그랬는데 그 법을, 시행령을 바꿔서 깨끗하게 스캔 떼서 예전 기록을 다 정리한 경우가 있거든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알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기동순찰대 관련해서 현장 직원들은 싫어하지요, 그렇지요? 지휘관들은 좋아라 할 거고.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현장 직원들은 일부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현장 직원들 입장에서는 기동순찰대하고 자기들은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구대·파출소 직원들은 112 신고 받으면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고 처리를 해야 되고……

○서범수 위원 그것 제도개선하기로 했지요, 그렇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서범수 위원 그 제도개선하는 내용을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기동순찰대가……

○서범수 위원 이 역사 압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압니다. 23년도에 서현역에서 이상동기 범죄 사건들이 생겨서……

○서범수 위원 제가 2015년에 생활안전국장 할 때 처음 도입했어요. 그래서 내가 역사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때도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 그런데 계속 연결이 됐는데……

하여튼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뭘야, 별것 아니면서 인원만 갖고 가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명확하게 가르마를 타 줘야 됩니다, 현장 직원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한창훈 국장님, 본인 일이잖아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아니, 이것은 법에 이 내용을……

○서범수 위원 이걸 112인가?

그것 보완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 관련해서 제주경찰청은 기동순찰대가 2대가 운영되잖아요. 그렇지요?

○경찰청범죄예방대응국장 고평기 아닙니다. 1대입니다.

○서범수 위원 그것은 달라요. 그것하고는 달라요.

○소위원장 위성곤 그것은 형기대인가?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소위원장 위성곤 형기대가 2대 운영되나요? 그렇지요? 청 단위……

○경찰청차장 유재성 청 단위에는 보통 기동순찰대가 있고 또 형사기동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신규로 만들어진 게 형사기동대입니까? 기동순찰대잖아요. 지금 2대가……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기동순찰대하고 형사기동대하고 2대가 돌아갑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몇 명 단위지요, 1대가? 70명?

○경찰청범죄예방대응국장 고평기 97명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97명? 그러니까 제주는 2대 운영하니까 전체 인력의……

○경찰청범죄예방대응국장 고평기 제주가 1개 대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1개 대입니까? 1개 대인데 전체 인력의 4%를 여기에 투입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 인원을 주시든지……

서울청은 보니까 1% 미만이고 다른 데는 다 그 정도인데 제주는 전체적으로 모수가 작으니까, 마찬가지로 운영하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줄이든지 아니면 필요인력을 만들어서 보내 주시든지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텅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잠깐만 다음 하시기 전에, 경찰청까지 지금 시간에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2시에 본회의 하고 3시에 다시 열어서 1시간 정도 회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하고 그리고 한 30분 정도 이따가 다시 전체회의를 해야 돼서, 끝나고 나서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회의를 하고 전체회의를 한 4시 반경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하시지요.

○전문위원 나아정 4번에서 6번까지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교통안전활동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은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금전적 혜택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것으로 24년 예산현액 18억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24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와 전체 교통사고 건수 대비 비율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의 경우 반납자 중 실제 운전자 반납 비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김성희 위원, 이달희 위원, 이성권 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또한 고령운전자 자진 반납에 따른 보상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지급금액도 지자체별로 차이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동시에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경찰청은 실제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하는 등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국비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고령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체이동수단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 및 타 사업과 연계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5번 사항입니다. 일반회계交通安全활동 사업입니다.

대형 오토바이 승무경찰관 보호복 구매 사업은 경호·에스코트 등 업무를 수행하는 대형 오토바이 승무경찰관에게 보호복을 구매·지급하는 것으로 24년 예산현액 2억 5550만 원 중 2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308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62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1년부터 24년까지 매년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달희 위원, 이성권 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경찰청은 대형 오토바이 승무경찰관 보호복 구매사업에서 지연 및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초에 수요조사 및 계획 수립을 실시하고 납품기간 및 검수기간을 고려하여 보호복 지급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 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6번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해외치안협력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해외경찰주재관 등 공통운영비 사업은 경찰청 소속 해외파견자의 안전한 거주 및 근무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7800만 원이 고정 편성되거나 실제 집행금액은 약 4000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 차량 보험료 및 직원 차량 공용사용 지원비는 해외파견 경찰협력관이 개인 차량을 국외로 이전하거나 현지에서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비용으로 24년 예산현액 총 2300만 원 중 2300만 원 전액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외파견 공통운영비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과 직원 차량 보험료 및 공용사용 지원비 전액이 미집행되었다는 지적이 이달희 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경찰청은 향후 해외파견자 공통운영비 사업에서 연례적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 인원과 단가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직원 차량 보험료 및 공용사용 지원비 집행률 저조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것, 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4번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관련입니다. 제도개선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고령자 대중교통 시책과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을 연계하고 실제 운전을 증빙하는 고

령자 대상 추가 금액을 지원하는 등 사업효과 제고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5번 대형 오토바이 보호복 관련입니다.

이 안전도 제도개선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계약 납품 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전년도 12월에 수요조사 및 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계획을 실시하는 등 보호복 지급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겠습니다.

6번 해외과건인력 운영비 집행률 제고 관련입니다.

이 안전도 제도개선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수요 및 실집행을 면밀히 검토하여 26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위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하면 인센티브가, 지금 금액이 통상 10만원인데 지자체별로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차이가 존재한다, 이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게 월 10만 원입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아니요, 한 번 할 때……

○고동진 위원 한 번에?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반납하면……

○고동진 위원 한 번 하면 10만 원 하고 끝이에요, 그러면?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래서 내년에는……

○고동진 위원 아니, 누가 그것 받으려고 반납을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65세 되면 지하철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짜로 탈 수 있고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버스비 같은 것도 지원을 하는데 이 고령자가 운전을 했던 사람들은 지하철을 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자기가 운전을 하는 것을 선호하면 개인용, 예를 들어서 대리운전이라든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쿠폰을 준다거나 이런 생각은 혹시 내부적으로 안 해 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반납 잘 안 하려고 그럴 텐데.

○경찰청차장 유재성 그래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은 지자체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안들 중에서 실효성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도 공유를 해서 이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실제 운전하는 사람이 반납을 한다 그러면 이걸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일회성으로 20만 원 받으려고 얼마나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고 그럴지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65세 이상자가 사고율이 워낙 높으니까 가능하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하는 게 사실은 국민 안전을 위해서도 좋은 거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고 그러면 10만 원, 20만 원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방법은 없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그래서 저희가 운전면허를 반납해도 실제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시골 지역 이런 데에는 콜버스 같은 개념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고동진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것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자체별로도 하고 있는 게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고동진 위원** 나중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그런 게 정리가 되면 전부 다 의원실로 공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여기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연령은 어느 정도 기준으로 설정하고 진행하고 있나요? 80세? 75세?

○**경찰청차장 유재성** 65세……

○**소위원장 위성곤** 65세를 고령운전자라고 하면 시대적으로 맞나요? 통계적으로 관리하는데 65세는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고령운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75세든 80세든 이렇게 정하고 그 율을 가지고 통계를 관리하는 것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지 지금 이 상태로는 65세 이상이 모수는 엄청 많잖아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전체 인구의 한 30% 될 텐데 그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정책을 관리하면 실제 정책효과가 전혀 없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준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리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할 건지를 검토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70~80세 이상의 고령자 중에 사고율이 어느 정도 나는지를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사고 피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들어가는 것이 많은 건지 아니면 다른 정책수단을 통해 지원해서 그들의 면허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또 계신가요?

없으시면 요청한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7번에서 9번까지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경찰기동력강화 사업입니다.

경찰기동력강화 사업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차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940억 3600만 원 중 935억 32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노후차량 교체 사업과 증차 사업은 차량 구매계획과 실제 차량 구매 간 대규모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에서도 차량 구매계획과 실제 차량 구매 간 차이가 있어 면밀한 구매계획을 수립하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달회 위원, 이성권 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경찰청은 차량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노후차량 교체 및 증차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며 국회 예산안 심사를 거치면서 반영한 노후차량 교체 및 증

차 계획의 과도한 변경을 자제하고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8번, 일반회계의 장비관리유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전자충격기 구매 예산으로 2024년 27억 5500만 원을 편성하고 이를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경찰청은 한국형 전자충격기 개발사업을 통해 국산화를 시도했으나 2022년 구매 단계에서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되어 2024년 국산화 제품 예산액보다 단가가 약 100만 원 높은 외국산 제품을 구매하였는데 해당 업체는 경찰청이 계약 체결 이후 사후적으로 규격서에 기재되지 않은 성능 검증 기준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며 현재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구매계약 체결 당시 검증 기준이 규격서 등에 명확히 설정되지 않았으며 핵심 기준인 표적지 도달은 계약 체결 이후 협의로 사후에 설정되는 등 계약 체결 전 명확한 검증 기준 설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용혜인 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경찰청은 장비유지관리 사업에서 구매하는 장비에 대해 성능 기준과 구체적 시험 방법을 계약 체결 이전에 명확히 확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9번 일반회계……

○이달희 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철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예.

○소위원장 위성곤 9번은 방금 전에 철회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7번 노후차량 교체 사업 관련입니다.

제도개선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차량 교체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전자충격기 관련입니다. 제도개선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장비 개발·보급 시 전체 주기에 있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검증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산 전자충격기 개발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정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난번에 참석을 못 해 가지고 서면질의를 못 냈거든요. 부대의견 하나 내도 될까요?

○소위원장 위성곤 예, 서면질의를 내셔도 되고 꼭 서면이 없더라도 지금 안을 주셔도 됩니다.

○박정현 위원 보니까 해외치안협력강화 부분에 실제로 송환 실적은 매년 초과 달성이 되는데 송환율은 감소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2023년 대비 2024년 보면 79.1%에서 45.9%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보니까 2025년의 경우는 국외도피사범 송환율과 국내에서 도피 중인 외국인 범죄자들 있잖아요. 그것 송환율 평균값을 내서 성과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 눈 가리고 아웅 아니에요? 그리고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잖아요, 일선 경찰관들이 잡아넣은 사람들을.

여기 담당 부서가 어디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국제협력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국제협력관실에서 자기 성과로 챙기는 건데 이것은 안 맞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서 성과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계속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도 안 주고, 와서 설명도 전혀 안 하고 그렇습니다. 배 짜라는 겁니까, 지금?

○경찰청차장 유재성 아닙니다. 그것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환은 범죄자가 외국으로 도망가면 경찰 협력기관하고, 우리나라 경찰과 외국 경찰과 협력해서 송환하는 그런 절차가 가장 빨리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터폴을 통한 그런 경찰관 공조 또 국제……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해외도피 범죄자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급격하게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 해외도피자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목표치는 전년 대비해서 얼마를 더 데려오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가서는, 실제로 나는 사람 위에 뛰어서는 이 사람들 잡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환율로 제대로 측정을 하든 아니면 목표치를 제대로 측정하고 나서 목표치를 제시하든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에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부대의견을……

○소위원장 위성곤 예, 제안해 주시지요.

○박정현 위원 해외치안협력강화 사업 중에 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송환 실적 또는 송환율에 대한 성과평가를 근본적으로 다시 하고 그 내용을 제시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개선하는 것으로?

○박정현 위원 예.

○소위원장 위성곤 전문위원님, 들으셨지요? 그 방향으로 정리를 해서 제도개선으로……

○박정현 위원 주의를 주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주의로?

○박정현 위원 예.

○소위원장 위성곤 주의를 법령을 위반, 위법하거나 부당해야 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정현 위원 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주의……

○박정현 위원 이런 식으로 경찰에서 숫자놀음을 하면 안 되지요. 더군다나 해외도피자들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소위원장 위성곤 시정요구 받아서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찰차량 관련해서 순찰차 초기 계획에서 기능차량으로 바꿨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

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차량은 오래된 차량을 교체하는 사업이 있고 또 새로 신규로 사는 차량이 있는데, 2024년도에 기동순찰대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기동순찰대가 신설되면서 팀별로 하나씩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330대를 신규로 구입할 그런 수요가 되다 보니까 교체하는 차량과 신규로 구입하는 차량의 그 비율이 좀 바뀐 겁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기동순찰대는 예산 수립 당시에는 원래 설치할 계획이 없었다는 거네요, 그사이에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고?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예산을 제출할 때 관련된 세부 내역 산출 근거를 국회에 제출하잖아요. 그런데 산출 근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인 거잖아요. 다음부터는 면밀하게 사실에 기반해서 산출 근거를 마련하시고 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위원장님, 그리고 국제협력관이 해외 송환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정현 위원 따로 설명 주시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예, 별도로 설명을 주시고요.

이상으로 오늘 경찰청 소관 의결……

관련 문구는……

○서범수 위원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예.

○서범수 위원 제가 행안위에 3년 만에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결산한 데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이 좋아 가지고 지적사항이 별로 없는데 그 없는 가운데서도 보면 늘상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과태료 문제 그다음에 경찰병원 수익 문제 그다음에 영상녹화 실시율 문제 이런 게 늘상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아마 내년 결산 하면 이거 또 올라올 거예요. 기획조정관이 예결위에 가 있던데……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예결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기획조정관 위주로 해서 지적되는 사안들, 연례적으로 지적되어 있는 사안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좀 고쳐나가 줘야 된다, 실제로 진짜.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늘상 와서 ‘검토하겠습니다’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제도개선하겠습니다’ 하면 내년에 오면 또 똑같은 소리 합니다.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

○소위원장 위성곤 서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연례적으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 경찰청은 전담팀을 만들어서 그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할 것’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일 시켜서 미안합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아닙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동의하시지요, 위원님들?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 부대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연례적으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서범수 위원님께 잘 물어보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우리 소위원회가 논의하고 시정 요구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이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혁신처 소관 사항입니다.

박용수 차장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 박용수입니다.

평소 인사혁신처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사혁신처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1번부터 5번까지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입니다.

소위자료 1쪽입니다.

첫 번째, 국가시험 시행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시험관리 부대비용 사업은 당초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세목 조정을 통해 3억 37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4억 2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당초 예산에 비해 세목 조정의 규모가 과다하고 다수의 시설 공사가 예산편성 시점에 그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인사혁신처는 향후 당해 연도 예산 조정을 통한 추가적인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을 지양하고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시정요구사항과 함께 시정요구 유형은 이달회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주셨습니다.

2쪽입니다.

두 번째, 개방형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2023년부터 개방형직위 선발 실적이 감소하고 있고 특히 작년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간주 규정이 삭제되어 개방형직위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통한 공무원 선발이 감소함에 따라 각 부처별 일반임기제 채용은 확대되므로 채용 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인사혁신처는 부처별 일반임기제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사전 절차 확인, 사후 점검 등 종합적인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이달회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주셨습니다.

3쪽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국제기구와의 협의 지연, 실제 소요에 못 미치는 예산편성 등의 원인으로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신규 임용 지연 및 기존 직위의 장기 공석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인사혁신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적정 예산을 확보하여 파견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국제 현안 대응력 약화를 방지하도록 노력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역시 이달회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주셨습니다.

5쪽의 4번 사업은 3시간 전에 의원실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걸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마지막 사업으로 공무원 재해보상사업운영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현재 공무원 마음건강센터가 전국 10개소에 총 26명의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상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에 센터에 상담사 추가 배치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담사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이 발생하고 있고 현행 10개 센터만으로는 전국 공무원의 상담 수요를 충족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이에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설치 지역을 확대하고 센터별 적정 상담사 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상담사 인력을 증원함으로써 동 사업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상담사 근무 여건 개선을 도모하라는 시정요구와 함께 이달회·한병도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유형을 주셨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첫 번째, 체계적인 계획에 따른 시설관리 노력 필요와 관련해서 수용합니다.

향후에도 시설 현황에 대한 사전 검토와 체계적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임기제 관리감독 관련해서 수용합니다.

인사혁신처는 향후에도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각 부처에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사후 점검을 강화하는 등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국제기구 고용휴직 관련해서 수용합니다.

외교부 등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국제기구와 사전 조율을 원활히 하고 적정 규모의 예산 확보를 통해서 고용휴직자의 임용이 지연되지 않고 선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컨설팅 사업은 철회된 거고요.

다섯 번째,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와 관련돼서 수용합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센터 추가 설치 및 상담사 증원을 통해 증가하는 상담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운영은 내년에는 지금 어떻게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내년에는 일단 예산으로요 센터 하나를 추가 설치하는 게 잡혀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몇 개를 하시려고 하는데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지금 저희가 17개 시도에 한 군데씩 다 센터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개고 내년에 11개, 그래서 최소한 5년 내에 17개 시도에 하나씩 다 갖추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최근에 이태원 참사 현장에 갔던 소방관이 유명을 달리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사실 그간에도 꽤 있었고 그리고 그런 참사 현장이 아니더라도 요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 못 해서 실제로 심리적으로 여러 위축과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그래서 그만두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냥 5년 이렇게 잡지 마시고 조금 적극적으로…… 그리고 있는 공간을 다시 활용하든 뭘 하든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조금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17개 광역 시도에는 빨리 마음건강센터가 입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찾아가는 심리상담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마음건강센터를 더 빨리 효율화해서 운영하고 또 재해 예방 관련돼 가지고 법제화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서둘러 주세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예.

○이달희 위원 저도 이 문제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같으면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넓은 곳에 마음치유센터가 한 곳 생긴다 해도 그 많은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인사혁신처가 병원이나 심리학 교수들이나 이런 쪽에 MOU를 맺어서 정서치료 바우처를 공무원들한테 주든지 이런 다른 형태가 좀 필요합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말씀하셨듯이 지금 비대면 상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에서 요청할 때 상담사가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고 있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와 맞춤형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런데 공직자들이 막 마음이 이렇게 한번씩 공황장애 같은 느낌을 받아도 예를 들어서 도청 내에 그런 센터가 있다고 해도 거기 가서 기록이 남고 이러면 내가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또 보직 배치에 편견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저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사혁신처나 공직사회 전체가 정서치료라는 심리…… 심리도 손 다치고 찰과상 입었을 때 약 바르듯이 그렇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는 분위기를 좀 우선 만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공직사회 전체에서.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추가해서 저도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국가사무예요, 지방사무예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마음건강센터 설치라든지 지금 제업무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헌법기관공무원 모두 포함됩니다. 적용 대상이 전부 다……

○**소위원장 위성곤** 적용 대상은 전부 포함되는데 그래서 누가 하는 거냐고요. 정부가?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예, 정부가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 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특별법에 따라서 경찰·소방 이쪽은 별도로 설치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더 늘어나고 더 요구가 많아질 거라고 보아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가사무로 해야 될지 지방사무로 해야 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용자 중심으로 이 체계를 어떻게 짤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할 센터도 필요하고, 그건 운영을 주로 하는 거고 상담은 또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또 계신가요?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조문상** 소위 자료 8쪽입니다.

기금 2개하고 부대의견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기금 관련해서 첫 번째 사업입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운영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최근 4년간 선정된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들 중에 주택사업관리와 대여학자금융자 등 2개 사업은 평가에서 두 차례 이상 지출구조조정 대상으로 포함되고 있음에도 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지출구조조정 간의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해당 2개 사업은 계획액이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되더라도 지출소요가 계획액을 초과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이를 충당하기 위한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출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인사혁신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계획 수립 시 사업규모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출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김성희 위원님께서 주의를 주셨습니다.

다음, 10쪽 기금 관련해서 두 번째는 대여학자금 수탁금의 반환입니다.

지적사항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국회 시정요구 및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국가기관·지자체 등에 반환되어야 할 수탁금 잉여금이 매년 예산에 과소 반영, 과다 유보되어 2024년 결산 기준 누적된 규모가 8621억 원에 달하는 등 비효율적 재정 운용이 초래되고 있고, 두 번째는 수탁금 잉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반환되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운용되고 있어 이는 수탁금 잉여금을 내부에 과도하게 유보할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첫 번째로 인사혁신처는 과도하게 누적되고 있는 대여학자금 수탁금 잉여금을 신속하게 반환할 것과 아울러 유형으로는 김성희 위원님께서 주의를 주셨고요. 두 번째로 인사혁신처는 수탁금 잉여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이자수입을 반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유형으로는 김성희 위원님께서 역시 제도개선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에 부대의견 1건입니다. 위성곤 위원장님께서 주셨는데요.

읽어 드리면 인사혁신처는 의원면직 사유를 세분화하여 기록하고 정신건강 상담·퇴직·사망 이력을 연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또는 인사규정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첫 번째, 지출구조조정 계획 관련해서 수용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정사업 평가 취지에 맞도록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지출구조조정이 실제로 연계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련해서 전부 다 수용합니다. 대여학자금수탁금의 잉여금 반환 예산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반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여학자금수탁금의 잉여금 운용수익 반환과 관련해서는 근거 규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대의견 관련해서 수용합니다. 의원면직 사유에 대해서는 민간 사례 연구 및 개인정보 문제 등 쟁점을 검토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면직 사유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특히 소방공무원 등 체계적인 정신건강 관리가 요구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목적에 맞게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의 정신건강 관련 상담이력 등은 고도의 민감정보로서 이를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때 공무원들이 상담이나 진료 자체를 기피하게 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첨언하면, 의원면직 사유를 왜 관리하자고 하나면 일반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 까지도 그 회사 퇴사자들에 대해서 면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왜 퇴사를 하는 이유를 듣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이 속한 조직의 문제, 조직의 혁신 방안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그거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한 의미로 부대의견을 요청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들은 특히나 그런 관리가 철저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 12·3 계엄 이후에 공직자들이 헌법에 대한 이해력이 매우 낮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 부대의견으로 위원님들께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헌법교육을 보다 더 면밀하고 정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하는 부대의견을 달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이달희 위원 하나만 좀……

헌법 시험 안 칩니까?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지금 시험과목이 직급별로 5급 같은 경우에는 헌법 시험 과목을 치게 돼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7급은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7급도 있고 9급은 없습니다, 지금.

○소위원장 위성곤 9급은 없고 7급도 선택이지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7급 일반직은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일반직만 있고 나머지는 선택이어서……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예, 기술직은 없고……

○소위원장 위성곤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헌법은 당연히 공직자가 국가에 대한 자기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술직도 헌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민주공화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우리 공동체를 유지할 것인가가 기본적인 핵심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되어진 내용을 부대의견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동진 위원 부대의견에 일단 공직으로 기존 채용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쪽으로 해야지 기술직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것까지 해 가지고 또 시험과목에 넣고 그러면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시험과목이 아니라 들어와 있는 공직자들 대상으로?

○고동진 위원 예, 들어오고 나서.

○이광희 위원 그게 아니고 공무원들은 92시간씩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교육으로 보완을 해야지.

○이광희 위원 그 교육에 민주시민 교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이 주로 빠져 있어. 거기에 무슨……

○고동진 위원 아니, 헌법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달희 위원 그냥 민주시민 하지 말고 헌법 교육, 헌법 얘기를 해.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헌법 교육……

○이광희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이 정도까지

는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시민 교육 자체가 빠져 있어, 민주주의 교육이. 그러다 보니까 내란에 참여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고동진 위원** 그런 건 아니고……

○**이달희 위원** 아이, 내란에 누가 참여해?

○**이광희 위원** 공무원들이 얻다 대고 국민을 향해서 충부리를 겨눠?

○**소위원장 위성곤** 앞서 얘기했듯이 헌법을 채용시험과 관련되는 검토를 하고 교육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예, 알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채용시험에 넣는 것은 너무 가변적이고 또 공무원은 입직하면서 헌법 실력을 볼 필요가 없는 직렬이 있으니 제가 보기에 채용시험에 헌법을 넣는 것보다는 공무원들 교육 과정에다가 그냥 강좌를 넣는 걸로 하는 게 유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달희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조문상** 헌법 교육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넣는 게 아니지요?

○**소위원장 위성곤** 예, 승급 시마다 이런 교육들이 있을 텐데 그 교육 시간에는 반드시 헌법을 규정해서 넣어서 헌법 교육이 일상화되게끔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예, 헌법 가치 교육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우리 소위원회가 논의하고 시정요구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건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중앙선관위 소관 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동완 사무차장,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강동완입니다.

먼저 국정 심의에 진력하시는 가운데에도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8월 1일부터 사무차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더욱 변화하고 국민들의 요구에 성실히 답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 선거관리를 하려다 보니 예산 집행 과정에서 일부 관계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겸허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성심껏 우리 위원회

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우리 위원회의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1번부터 3번까지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이 총 6건이고 부대의견이 2건입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인건비 예산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인건비 예산을 연초 30억 1300만 원을 이용하는 등 총 36억 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나 22대 총선 이후 복직자 증가 등으로 인건비 부족이 발생해서 이를 위해 이·전용 및 세목 조정을 통해 다시 65억 35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단 부분 보시면 인건비 예산 충당을 관련 과도한 이·전용은 타 세부사업의 필요 사업들을 추진하지 못하거나 축소·지연 실시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반복적인 인건비와 타 사업 간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지난 3년간 휴·복직자 추계 등을 통해 내년도 예산에 적정 인건비 예산을 반영하며 선거 직전 휴직자 대거 발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박수민 위원님께서 주의를, 박덕흠·이달희·이성권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주셨습니다.

3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공정선거지원단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보통 지원단 운영예산으로 약 253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2024년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건수는 128건으로 전체 조치 실적의 7.3%에 불과하여 투입 대비 낮은 성과를 보였고 이러한 결과는 한시적 인력 중심 운영과 정치관계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시민을 중심으로 한 채용 방식 그다음에 교육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량 및 정성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인력풀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인력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등 운영체계 전반에 전문성 및 지속성을 강화하라는 시정요구와 함께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이달희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주셨습니다.

4쪽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동 지원단에 지급한 성과수당은 건당 2만 원~20만 원으로 다양하게 지급되었는데 성과수당은 기준 금액을 월별 20만 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과 수준, 성과 내용 등을 고려하지 않는 기준이 다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고, 선거법 등 법규 평가에 대한 성과수당의 경우 우수한 성적이라는 동일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금액이 다양하고 법규 평가의 심사 목적인 선거법 이해도는 지원단 자체의 자격 요건으로 보아 이를 평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의 성과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하고 법규 평가 우수자에 대한 성과수당 지급을 재검토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김성희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주셨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1, 2, 3번 모두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다만 1번의 경우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조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작년 4월 기재부 협의를 거쳐서 인건비 30억 원을 국회의원선거 관리비로 이용 처리한 것은 선거관리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사집계부에 수검표 도입을 하면서 추가 개표사무원 수당 등을 확보해야 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연간 소요 인건비 및 인력 운영에 대한 면밀한 추계와 계획을 통해 정확한 인건비 예산편성을 하겠으며 지적하신 것처럼 우선 내년 예산 정부안에는 적정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선거 시기 휴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인사 정책을 추진 중에 있어 선거일 휴직률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내년 제9회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휴직자 최소화 및 복직자 등 상황 파악·관리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인력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선거 직전 휴직자 대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무엇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방안은 일단 휴직예정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는데 공문으로 선거일 6개월 전에 전 위원회 직원들에게 휴직할 분에 대해서 사전에 제출하라고 명단을 파악하면서 만약에 복직을 하게 되면 현 직위에 있는 시도가 아닌 타 시도에 배치할 수 있다고,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사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임박한 한두 달 전에는 다시 휴직 자체 공문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질병이나 가족돌봄 휴직자에 대해서는 휴직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휴직자에 대해서 실제로 이 양반이 휴직 취지에 맞게 제대로 휴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양부남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직전 6개월 전에…… 선거 직전에 휴직예정자를 신청받고 그런 경우 복직 시 타 시도로 갈 수 있다고 고지한다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이것 지금 한 번도 시행을 안 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아니, 지난 국회의원선거 때 저희가 시행했습니다.

○양부남 위원 했더니 어떻던가요, 효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2023년 말에 휴직예정자 사전 파악을 하고 예고를 했더니, 저희가 휴직률이 2022년 20대 대선 때 6.6%였던 것이 작년 국회의원선거 때는 5.6%로 1% 줄어들었고요. 이번 대통령선거 때는 다시 4.8%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평균 휴직률 대비 한참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양부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안예요?

○이달희 위원 예, 제도개선 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이달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1번 인건비 예산의 과도한 이·전용 관련해서는 제도개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조문상 소위 자료 6쪽, 재외선거관리 홍보예산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재외선거 홍보 방식에 대한 유권자 의식 조사 결과와 달리 동 사업은 언론 매체를 이용한 홍보에 전체 예산의 60.6%를 집행하고 온라인 광고, 콘텐츠 제작, 재외선거 홈페이지 운영 관리 등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에는 16.8%만 집행해서 실제 유권자의 인식과는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체 환경의 변화, 재외유권자 의식 조사 및 재외국민의 매체 활용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매체별 홍보예산 배분을 재조정하는 등 홍보 효과를 제고하라는 시정요구와 함께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이달희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주셨습니다.

7쪽, 위탁선거관리경비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동 사업 예산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하는 위탁선거관리경비에 한정되고 위탁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는 법적 근거 없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고 있어 결산 대상에 누락되고 있는데 국가재정법은 예산총계주의를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현물출자, 외국차관의 전대 등 몇 가지 예외사항만을 예외로 두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17조상의 예산총계주의를 고려하여 위탁단체가 부담하는 위탁선거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양부남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주셨습니다.

8쪽입니다.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와 관련하여 지적사항을 보시면 선거참관프로그램 추진에서 국가재정법상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 개별 장·관·항 간 예산 이용의 원칙적 금지에도 불구하고 별도 프로그램(항)에 편성된 사업인 서울국제선거포럼 예산을 통합하여 단일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비용을 집행하였다는 문제와 함께 실제 집행에서 항공임 및 숙박비 등에서 세부사업 예산 구별 없이 집행하고 사업 수행업체에 과목별 구분 없이 사업비를 일괄 지급하였으며 교통수단 임차에서 차량 사양이나 운행 거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액 단가를 측정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집행 절차를 점검하고 재정 통제 및 집행 관리 체계를 강화하라는 시정요구와 함께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이달희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업 수행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예산과목별 편성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요구와 함께 역시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이달희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주셨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우선 4번의 경우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지적 수용합니다. 앞으로 재외선거에 있어 인터넷 이용 홍보 비율을 높이는 등 홍보 효과성 제고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겠습니다.

실제 원래 대통령선거에서는 인터넷 이용 홍보 예산집행 비율을 작년 총선 때보다 대폭 올린 39.2%까지 상향시켰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인터넷 신문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위탁선거관리경비 관련해서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님의 지적 겸허히 수용합니다. 해당 지적 내용의 취지는 위탁선거경비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위탁선거경비에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 근거를 명시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양부남 위원님께서 지난 2월에 발의해 주셨는데 7월 9일 행안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아쉽게 해당 내용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박수민 의원실에서도 최근 해당 법률의 위탁선거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에 대해 이해해 주셨고 또 최근에 존경하는 양부남 의원님과 박정현 의원님 또 이광희 의원님 공동발의로 개정법률안이 8월 27일 재발의되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화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안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향후 유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세부사업별 목적과 내용에 적합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4번에 보면 도표가 있잖아요. 여기 도표에서 전체, 실제 투표자 이랬는데 거기에 재외선거 계도할 수 있는 홍보예산 집행 현황이 빠졌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이게 비교가 정확하지 않은데 보면 인터넷 이용 홍보, 해외에 있는 분들은 대체로 인터넷을 보고 거기에 관련해서 실제 투표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실제 집행한 결산에서 보니까 이번 대통령선거에는 아까 삼십몇%로 올렸는데 24년도는 16.8%밖에 돈을 안 썼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곳은 포털사이트 및 선관위 홈페이지나 SNS 이런 쪽이 해외에 있는 동포들한테는 유용하게 영향력이 많은데, 돈은 16% 정도밖에 안 쓰여서 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런 2024년도 지적에 저희들이 수용해서 올

해 대통령선거 때 반영했다는 말씀……

○이달희 위원 삼십몇%인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39.2%로 상향시켰고요.

○이달희 위원 그래서 이게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니까 작년에도 지적을 받은 사안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아닙니다. 작년 총선 때 지적받은 것이 지금 이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알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잠깐 한번 문의를 해 보면 재외동포들 중에, 재외동포라 그러면 몇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투표권을 몇 %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은 우리가 재외동포 그러면 상당수가 시민권자들이 많잖아요.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도 꽤 있으시지만 현지에서 시민권을 얻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그분들은 투표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대략적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신고되는 선거인수는 본인이 신고하기 때문에 24년 작년 총선 같은 경우에 대략 전체 선거인이 14만 7000명입니다. 그런데 외교부나 이쪽에서 갖고 있는 재외 유권자는 190만 명~200만 명 정도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 정리된 자료는 없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 숫자가 제가 여기저기다가 문의해 봐도 정확한 숫자가 아직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해외에 나가서 거기 한인대표나 지역의 이런 분들과 얘기를 나눠 보니까, 그 지역에서만 해당되는 거겠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 10명 있으면 4명 정도가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10명 중에 4명. 나머지는, 유학생이나 주재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 국내 소식을 접하면서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사실 홍보가 별로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관위에서 해외에 계시는 동포분들이 몇 %가 과연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한번 밝혀 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그러면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 중에 얼핏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65세 이상이 되면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런데 복수국적 취득하기가 굉장히 너무너무 어렵대요. 6개월을 한국에서 살아야 되고 그것 어플라이하는데 아주 과정이 너무 까다롭게 돼 있어서 대부분 복수국적 취득하려다가 포기한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조사해 봐 주셔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봐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일단 국가마다 사정이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파악해서 의원실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공유를 한번 해 주세요.

○김성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실제로는 한국인이 700만 명 정도 외국에 나가 있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법적으로 국적이 한국인 사람이 200만~250만 정도 보고 있고요.

○**고동진 위원** 거기에 유학생하고 주재원도 포함되는 겁니까?

○**김성희 위원** 유학생하고 주재원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되는데 애매하게 파악되는 게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혹은 예를 들면 고려인 그다음에 중국에 계신 재중동포 포함해서 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딱히 우리나라가 행사를 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이, 등록소재지가 없는 우리나라 국적자가 꽤 있거든요.

○**고동진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야 사실은 투표권이 원래부터 없었던 거고……

○**김성희 위원** 아니, 그분들은 클레임을 하면 투표권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동진 위원** 한국 여권요?

○**김성희 위원** 예, 이런 분들의…… 그러니까 한국 여권이 없어도 여권을 만들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숫자가 파악이 안 되는 거고.

○**고동진 위원** 아, 그것도 중요한 거……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 외국 나가 있는 사람들 숫자는 파악이 되는 거라서 지금 선관위에서는 할 수 있는 한 거의 최대한을 다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자기가 드러내 놓고 영사관을 찾아가서 ‘내가 납니다’라고 하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라서 그 부분은 계속, 약간 베이그(vague)한 영역인데 대략……

○**고동진 위원** 제가 지적한 것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해외에 나가서 시민권을 얻으면 사실 우리나라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김성희 위원** 그것은 양쪽을 완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취득할 수가 없어서 그건 구분이 명확하게 됩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면 외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65세 이상이 되면 요새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까?

○**김성희 위원** 그것도 우리나라 관공서에 통제가 다 잡히지요.

○**고동진 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복수국적을 취하고 싶어도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져서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을 두 번째로 지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도 한국 투표에 참여하고 싶어. 그런데 복수국적이 안 돼’, ‘그러면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랬더니 ‘그것 하는 데 6개월을 한국에서 거주해야 되고 절차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그게 현지 교포들의 얘기였어요, 이번에 만나 보니까.

○**소위원장 위성곤** 답변해 보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부분은 국외부재자, 재외국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동진 위원** 참고로 바로 미국이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부분은 국회에서 법무부라든지 다른 기관에다가 재외국민 규정을 바꾸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는……

○**소위원장 위성곤** 관련 소관 업무가, 재외동포청에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고동진 위원** 선관위에서는 정확하게 그 숫자는 파악이 안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국외부재자 신고는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선거인으로 등록을 시키기 때문이에요.

○**소위원장 위성곤** 재외동포의 문제는 재외동포청 관련해서 논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관은 아닌 것 같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런데 두 분 다 해박하십니다.

또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부대의견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입니다.

10쪽입니다.

부대의견은 총 2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주호영 위원님께서 주신 부대의견(안)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자체의 신뢰성 및 기관의 대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대책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시행한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모경중 위원님, 채현일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 혐오표현, 선동적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부대의견 첫 번째, 주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수용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든 해당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며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공직선거절차TF팀 운영을 통해서 선거 과정의 문제점과 대책 등을 지금 자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3개월 동안은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중앙선관위원장 직속으로 운영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자체 마련하여 시행 중인 그동안의 인사·감사 등 조직혁신안과 선거절차 개선안 등이 국민 눈높이에 적정한지를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우리 위원회의 현 상황을 가감 없이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은 과감히 또 수용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타파하고 변화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혁신 또 혁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대의견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에서는 허위사실 등이 포함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존경하는 모경중 위원님과 채현일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다만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자칫 정당활동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현행 법률만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는 다소 곤란하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는 규제 대상이나 방법·범위 등에 대해 정당활동 보장과 규제

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국회에서 신중하게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국회에서 정당 현수막 규제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범수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못 하겠다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아니, 두 번째 사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예를 들면 해당 내용 중에 혐오표현이라든지 선동적 내용이라는 게 다소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법률 심사 과정에서 약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허위사실은 된다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 영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대한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현행법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첫 번째 부대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좀 더 드리면요. 이걸 지금 피해자가 내가 몸가짐을 더 바로하겠다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로요. 중국 무슨 와이파이를 달아 가지고 정보가 해킹되느니 서버에서 사전투표가 조작되느니 하는 그런 얼토당토않은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지. 지금 서버관리 대책을 바꾸실 거예요?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관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지금 얼토당토않은 부정선거 주장을 확산시켜서 공정한 선거 관리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태도에 대해서 엄중한 대책을 마련하셔라라고 부대의견을 한 줄 더 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제가 추가하면 저희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계속 휴대폰으로 보내 오는데요. '6·3 대선 무효. 중국인이 투표한 이재명 당선 무효', 중국인이 이재명에게 투표할 수 있습니까? 선관위 공식 입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외국인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없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소위원장 위성곤 그다음에 6·3 대선은 무효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아닙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어떤 정당이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선관위…… 이것은 민주주의, 선거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소위원장 위성곤 선관위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선관위는 왜 입을 다물고 있어요?

두 번째, '대한민국이 중국 자본에 매수', 이게 정당 현수막이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지금 정당법 37조에서는 정당이……

○소위원장 위성곤 정당법이라 하면, 정당법은 결국 헌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거고 사실상 이걸 헌법을 위반한 행위들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헌법적 해설하고 선관위가 적

극적 대응을 하는 것이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선관위가 필요한 이유지요. 그게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 선관위는 필요한 조직이 아닌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위원장님께서 저희 선관위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그 현수막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선관위 스스로가 먼저 해당 현수막에 대한 철거 명령이라든지 고발이나 수사 의뢰 조치를 하지 못하는 이유 자체가, 저희들 선관위는 제정된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당법 37조에 나와 있는 해당 내용, 정당이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인쇄물·시설물·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저희 선관위에서는 지금 현행 법률로는 정당에서 게시한 현수막에 대해서 제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련 입법 법률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것에 맞춰서 입법이 된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범수 위원님.

○**서범수 위원** 그리고 주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대의견(안)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선거 자체의 신뢰성 및 기관의 대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조금 전에 위성곤 위원장님 말씀하신 일토당토 않은 부정선거론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 선관위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한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걸 좀 알려야 될 것 아니냐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그런 이야기라는 거지, 이걸 어떻게 부정선거론에 편승을 해서 어떻고 이 이야기가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알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양부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부남 위원** 부대의견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허위사실, 혐오표현, 선동적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시행한다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혐오표현, 선동적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에 대한 유권적 해석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허위사실에 대한 그런 법률적 평가가 필요 없습니다.

또 하나, 정당법 37조에 의해서 정당의 표현의 자유 이걸 운운하는데 이것도 개인 명의로 허위사실을 한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지요. 그러면 개인 명의로, 제가 백번 양보한 겁니다, 정당 명의로 건 현수막에 있어서도 허위사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당법 37조를 운운하시니까…… 내가 백번 양보하고 개인 명의로 법률적 유권 해석이 필요 없는 허위사실을 거는 것은 명백하게 위법이에요. 이런 경우는 선관위가 자진 철거를 하게 해 줘야 돼요. 그게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위원님, 잠시……

○양부남 위원 그럴 의사가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부남 위원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로 제한을 하는 허위사실은 후보자나 배우자 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관해서 낙선,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까지 포함이 됐을 때 저희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정당법 37조에 따른 현수막에다가 후보자나 가족에 대한 언급 없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내용을 게시했을 때는 그걸 갖고 공직선거법 250조로 지금 처벌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물론 그렇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지요. 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허위사실을 게시를 하게 되면 그러한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모두 범죄가 되거든요. 이걸 고발하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않고, 고발해도 소극적으로 나오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50조 1항에 해당돼도 안 해. 250조 1항이 돼서 적극적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합니다.

○양부남 위원 고발 안 해도? 안 하던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경우에도 합니다.

○양부남 위원 거의 없어요. 내가 총선 과정에서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아닌 일반적인 허위사실도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그런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나서서 자진 철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관리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위성곤 정리해 주시지요,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정리? 잘하라는 겁니다, 핑계 대지 말고.

○소위원장 위성곤 잘하십시오.

○양부남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이나 또 인적 구성에서, 물론 위원님들께서 허위사실, 혐오표현, 선동적 내용은 길 지나가다가 자체 인지해서 선관위 안에 있는 현수막을 철거해라 이러시는데 이 부분에서는 선관위가 그렇게 하면 시민들로부터도…… 이 내용들이 대체로 추상적인, 그냥 구호성인 것도 많고 우리가 봤을 때 시민들이 평가하기에 과하다는 게 있어도 선관위가 직접 손을 대면 선관위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가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해당 정당에, 시민들이나 정당에서 신고를 하면 보고 그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정당에 경고를 하거나 철회 요구를 하거나 일차적인, 자체에 자정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톨을 두고 그다음에 안 될 때는 경찰에 고발해서 철거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바로 선관위가 길 지나가다가 저것은 혐오사실 같아, 뜯어내야 돼,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에 오히려 불신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도를 더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이것은 법적으

로 제도적으로 입법에 관한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광희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위성곤 시간이,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알겠는데요.

선관위가 현수막에 대해서 합법성을 부여했지요? 신고하신 적 있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합법성을 선관위가 부여했다고 경찰에서도 그러고 지자체에서도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관위가 합법성을 부여했어요.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걸려 있는 게 ‘중국 공산당과 선관위가 만들어 준 가짜 대통령 부정선거 주범을 수배한다’고 하는데 여기 동의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고발하지 않으셨지요? 왜 선관위가……

그래서 제가 여쭙봤어요. 그랬더니 선관위가 이것은 정당의 표현의 자유입니다. 이게 정당의 표현의 자유와 허위사실의 경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선관위가 현수막에 합법성을 부여하시냐고요? 선관위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선관위는 고발을 하셔야지요,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예컨대 신권 다발 투표지로 당선시킨 선관위입니까? 신권 다발로 당선시켰어요, 선관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전혀 아닙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왜 이걸 고발하지 않으시지요? 이것을 제가 신고를 했어요. 저희들 충북도당에서 현수막 전부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약 100여 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고 이것을 신고를 했더니 그다음 날 또 다른 내용으로 다 바뀌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 대통령인 줄 미국도 안다는데 가짜 대통령 이번에 뽑은 거 선관위가 합법적으로 승인한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전혀 아닙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왜 선관위가 합법성을 부여를 하시냐고요. 지금 경찰에도 고발하고 지자체에도 신고를 했더니 선관위가 합법성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선관위는 여기에 대해서 합법성을 부여할 권한이 없는 것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되지……

○이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판단을 왜 선관위가 하시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혐오 표현이나 선동적 내용이면 그러려니 하겠습니까만 예컨대 허위사실일 경우는 그에 대한 판단을, 그에 대한 허용조차도 왜 선관위가 하시냐고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지요. 허위사실은 범죄사실이잖아요.

○소위원장 위성곤 거기까지 하시고요.

부대의견으로 관련되어진 개선 대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법이 허용되었다 이런 판단을,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부대의견으로 결산 심사에서 선관위가 그것에 대해서 대책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국회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위원장님, 혹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위성곤 아니요. 그것 더 들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부대의견의 그 제목을 조금만 바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위성곤 뭐라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허위사실, 혐오표현, 선동적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 시 중앙선관위는 적극 지원한다’ 이런 형태로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위성곤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중앙선관위보고 지원하라고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 입법기관으로서 입법기관이 판단할 문제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무슨 지원을 해요, 선관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저희 의원실들의 민원이 하나 있는데 선관위가 재산등록과 관련되어서 소명서 제출을 요구하는데 무분별하게 소명서가 날아온다라는 의원실의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신고 관련 소명서를 요구하는 데 관련돼 있어서 기준을 좀 마련해서 운영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되어서 직원들이 등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개선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으니까 프로그램 개선에 대해서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공직자 재산신고 서버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소위원장 위성곤 재산신고 프로그램. 공직자 재산신고 프로그램을 선관위가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닌데요, 그거는.

○소위원장 위성곤 인사혁신처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소위원장 위성곤 정치자금과 관련되어서는 선관위가 하는 거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정치자금은 정치자금 회계보고만 저희들이……

○소위원장 위성곤 회계보고 하는 서버,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회계보고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프로그램이 너무 낡아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행정 실무자들이, 쓸데없는 것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요구해 가지고 몇 가지 개선을 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다 되었지요?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우리 소위원회가 논

의한 시정요구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관위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소방청인데요.

소방청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청 소관 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영팔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지요.

○**소방청차장 이영팔** 안녕하십니까?

소방청 차장입니다.

늘 저희 소방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4회계연도에 배정된 예산을 저희들이 성실히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나 집행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 또한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업무에 철저히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1번부터 7번까지 7개 안건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금요일 소위 자료 송부 시까지 7건이 제시가 되었고요. 1건이 철회되어서 총 6건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예, 6건만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나아정** 목차 7번이 철회되었었고요. 1번부터 6번까지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반회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지적사항만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 재정 투입은 지속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24년 17명의 소방공무원이 자살하였고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참여자 중 내근직 공무원이 30.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담인력이 부족하고 정신건강 관련 병의원 치료비 지원은 24년에 5억 6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박수민 위원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소방청은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강화 프로그램,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사업의 추진체계를 재검토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번, 일반회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사업 계속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24년도 동 프로그램 참가자 중 행정인력의 참가율이 현장인력의 참가율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과 또한 동 사업은 각 시도별로 시행되고 있는데 시도별 1인당 교육 비용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1인당 비용이 증가한다고 해서 만족도가 이에 비례하여 반드시 상승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한병도

위원님으로부터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소방청은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의 현장 인력 참여율을 높이고 적절한 교육비를 편성하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번 사항입니다.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4년도에 예산현액 652억 5400만 원 중 525억 8500만 원을 집행하고 126억 6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소방청은 사업 시행 중에 교통영향평가 결과 지하주차장 1개 층을 추가하게 되어 약 300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고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1년 이상 사업기간이 연장될 것을 예상해서 기본설계 단계에서 반영된 헬리패드, 의료가스장비공사 등을 제외하여 총사업비를 168억 원만 증액하고 별도의 타당성 재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24년도 총사업비 78억 원을 타당성 재조사 없이 증액하였고 부족한 공사비는 예산 전용을 통해 확보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김성희 위원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소방청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타당성 재조사 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형행화하였는 바 향후 유사한 집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4번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 사업인 119항공정비실 건립 사업은 전국의 소방헬기를 한 곳에서 정비하기 위한 사업인데, 지적사항을 보시면 동 사업은 실시설계 기간이 계획 대비 지연되었는데 연약지반 보강공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법정 의무시설인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누락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달희 위원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소방청은 공사 계약 체결 및 공사 진행 과정에서 철저히 집행 관리를 하여 119항공정비실이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할 것, 소방청은 향후 유사 건립 사업 추진 시 관계 법령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정 의무시설 추가 설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요구유형은 둘 다 주의입니다.

5번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소방산업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 사업인 공공판로컨설팅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24년에 30개사 컨설팅을 목표로 하였는데 실제로는 그 절반인 15개사만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이는 소방산업체의 저조한 관심, 복잡한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절차, 불충분한 사전 안내, 계약 추진 과정에서의 지원 미흡 등에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한병도 위원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소방청은 공공판로컨설팅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고품질 소방장비의 국내외 확산으로 소방산업 육성 기반 마련에 노력할 것, 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6번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119빅데이터 분석·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면 24년도에 플랫폼을 수탁·운영한 민간업체가 위탁운영 과업 71건 중 22건이 미흡한 결과를 보임에 따라 이를 보완하느라 사업이 연내에 완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고 사업 내용을 보더라도 유상 거래 데이터 등록 건수가 무상 데이터 등록 건수에 비해 적고 유상 거래 규모도 전년도에 비해 1억 원가량 감소하였으며 플랫폼을 통해 유통·거래되는 데이터의 증가 규모가 미미하여 현재와 같은 운영 방식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한병도 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소방청은 사회적 현안 및 재난 대비를 위한 소방 분야 빅데이터 품질 제고, 유통 활성화, 위탁운영 지속 가능성 강화, 플랫폼 실질적 활용성 개선 등에 노력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차장 이영팔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세부사업 실효성 제고 내용입니다.

이 사항들은 시정요구 주신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 전반에 대해서 검증과 연계성 강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후에도 소방공무원들의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또는 자살예방이나 보건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제도개선 필요 사항입니다.

이 사항 또한 시정요구 주신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직무별 스트레스 정도를 반영한 기준을 적용하여서 현장인력이 종전에는 7 대 3, 현장인력 7 행정인력 3, 30%가 있었는데 2024년도에는 개선을 좀 하고 올해도 개선을 해서 지금은 8 대 2 수준으로 현장인력이 훨씬 더 많이 회복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추후에 계속 검토를 하여서 현장인력이 훨씬 더 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일부 공사 누락을 통한 타당성 재조사 우회 부적정입니다.

이 사항은 소방병원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추가되는 비용이 증가함으로써 타당성 재조사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약 1년여 정도 연장될 것을 우려하여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는 타당성 재조사 기간을 줄여서 사업을 계속 추진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소방병원은 지난 7월 11일 날 무사히 건축물은 준공을 하였고 내년 6월에 정식으로 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보고드리며 소방청은 시정요구 주신 주의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4번 119항공정비실 건립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관리 필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법적으로 필연적으로 거쳐야 될 법정 의무시설을 적용하는 것, 신재생에너지 적용이 저희들의 경험 부족과 이거를 실무진에서 누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럼으로 인해서 이거를 다시 태우다 보니까 약 1년 3개월 정도 공사가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정요구 주신 주의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7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방장비 공공관로건설지원 사업 추진과정 개선 필요입니다.

이 사항은 2024년도에 저희들이 영세한 소방업체에 대해서 판로 개척과 산업 발전을 위해서 컨설팅을 해 주겠다고 처음으로 시도한 사업입니다. 물론 2024년도에 30개사 컨설팅을 목표로 하였으나 15개사만 컨설팅해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약 한 반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1억 예산에서 한 4800만 원을 이월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작년도에 했던 그런 경험에 비추어서 올해에는 좀 더 촘촘하게 준비를 하여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컨설팅을 확대해서 소방산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청 시정요구 주신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지속 가능성 강화 필요성 사항입니다.

2024년도에 저희들이 71건의 위탁용역을 주었는데 사실은 위탁을 받은 통신업체의 PM이, 총괄 관리하는 사업 담당자가 퇴사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준 용역에 대해서 실행이 좀 늦은 사항들이, 22건에 대해서는 사실 미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다음 연도 1월 달에 모두 다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규모 면에서는 유상 데이터 증가와 그다음에 데이터 오픈하는 방향, 데이터의 공공성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지금 확대돼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약한 525개사가 지금 기업에서 이용을 하고 있으며 방문자가 한 2만 4000여 명 그다음에 자료의 다운로드 개수는 약 한 2만여 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어나고……

또한 이 플랫폼은 민간 기업의 어떤 영리 목적 이런 것보다는 공공성이 더 많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시정 주신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차후에는 참여 기관을 좀 더 확대하고 수입 기반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나아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어지간하면 제가 이야기 안 하려 했는데요. 3번에, 이 최종책임자가 누구예요? 이것 완전히 예산 심사 무력화하는 거예요, 고의로, 실수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기존 총공사비, 많아야 300억 이상 되니까 이것 안 받고 피해 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차장님, 고의지요?

○소방청차장 이영팔 아닙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서범수 위원 고의지. 300억 이상 나면 다시 타당성 재조사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줄이고 나중에 또 타당성 조사 없이 78억 총사업비 받아 오고 또 부족한 공사비는 예산 전용해서 받고…… 완전히 예산 심사 무력화하는 거지, 이것. 그래 놓고 주의 받고 말아요?

○소방청차장 이영팔 보고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게 사업비가 기본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서범수 위원 아니, 늘어난 이유는…… 늘어나지요. 총사업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늘어나는 것 인정. 그러면 총사업비가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정확한 적법 절차를 밟아야

될 거잖아요, 예산 심사를. 그것 지금 회피한 거잖아요. 안 하는 거잖아요, 이것.

○소방청차장 이영팔 아닙니다. 총사업비 조정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여서 하기 때문에요……

○서범수 위원 그래, 기재부에서. 그러니까 기재부를 속인 거잖아요.

○소방청차장 이영팔 아닙니다. 기재부와 같이 협의를 하여서 사업비를 조정을 합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조정은 했잖아요. 그런데 300억 이상이 되면 다시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줄였잖아, 의도적으로. 300억에서 168억까지만 줄였잖아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것?

○소방청차장 이영팔 이게 갑자기 교통영향평가 결과 지하주차장을 1층으로 만드는데 2층으로 하다 보니까……

○서범수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300억이 늘었잖아, 총사업비가.

○소방청차장 이영팔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 300억이 늘었으면 는 대로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받기 싫으니까 총사업비를 168억 는 것으로 보고 속인 거잖아.

○소방청차장 이영팔 아닙니다. 저희들은 전체 다 이제……

○서범수 위원 이걸 어떻게 주의로 하고 말아요? 징계 먹여야지.

○소방청차장 이영팔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 이것과 관련하여서는 기재부하고도, 저희들 감사도……

○서범수 위원 기재부가 어찌 되었던 간에……

○소방청차장 이영팔 감사도 받았었고요. 기재부하고도 페널티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조정을 해서……

○서범수 위원 그러면 여기 심사는 뭐 하러 와요? 기재부하고 이야기하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면 하는 대로 가겠지만 죽어도 잘못된 것 없지요, 지금?

○소방청차장 이영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병원을……

○서범수 위원 속인 거잖아요, 고의로.

○소방청차장 이영팔 빨리 건립하기 위해서…… 그것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 놓고 주의 받고 말아? 어떻게 주의할 건데요?

○소방청운영지원과장 김재홍 위원님, 죄송합니다.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중간에 죄송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24년도에 별도 공사를 실시한 것과 관련해서 소방청이 자체감사도 실시하였고요. 외부 지적을 받아서……

○서범수 위원 자체감사……

보세요. 팩트만 확인합시다.

총사업비 300억 이상 늘었어.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돼. 그것 받기 싫으니까 168억 는 것으로 했어. 그렇지요? 나머지는 전부 다시 예산 전용하고 78억 사업비 조금 올렸고. 이거잖아, 지금. 팩트지요, 그게? 팩트 맞지요?

○소방청차장 이영팔 예,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속인 것 아니야, 지금 소방청에서.

○소위원장 위성곤 자체감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소방청운영지원과장 김재홍 담당자에 대해서 징계를 실시하였고요.

○소방청차장 이영팔 기재부로서는……

○서범수 위원 왜 담당자만 징계해요?

○소방청차장 이영팔 아닙니다. 기재부 쪽에서는 총사업비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연락이 되었지만……

○소위원장 위성곤 아니, 잠깐만. 절차 위반한 것 말고 감사 결과만 얘기하세요.

○소방청차장 이영팔 인적 제재로 해서 주의 한 명하고 엄중 경고 두 사람 맞았었고요. 그다음에는 소방청 자체의 기본경비 약 한 2억 7000만 원에 대해서 삭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하겠지, 당연히. 그래, 그렇게 받았잖아.

○소방청차장 이영팔 예, 맞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뭘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그래요?

○소위원장 위성곤 내부에서도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서범수 위원 자치단체에서 만약 이렇게 속이면요, 그 페널티 곱하기 1.5인가를 더 먹여요, 행안부에서.

○소위원장 위성곤 이게 소방청이 일반적으로 일하는 방식이지요?

○소방청차장 이영팔 아닙니다, 위원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아니니까?

○소방청차장 이영팔 병원이……

○소위원장 위성곤 차장님 말씀 들으면 일반적인 방식으로 들리는데?

○소방청차장 이영팔 아닙니다. 제가 보고를 잘못드린 것……

○서범수 위원 별로 심각성을 인식 못 하는데……

○소위원장 위성곤 자체감사에서 그렇게 위중하게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 보면, 잘못된 게 아니고 기재부랑 얘기했기 때문에 별문제 없습니다라고 위원들께 말씀하시는 것 보면 문화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소방청차장 이영팔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 질서의 문란과 관련한 사실은 맞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법한 거지요, 사실은. 그러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추진 방식 변경을 하려면 시정을 해야 되지요.

○서범수 위원 그 정도, 시정 하시지요.

○소위원장 위성곤 시정? 주의……

○서범수 위원 시정까지는 받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차장님?

○소방청차장 이영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소방병원 건립이 빨리 시급히 돼야 된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차장님 태도가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죄송하다고 하고 이 문제를,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야지 다른 소방청 후배 공무원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소방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우리 소위원회가 논의한 시정요구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청 관계자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결산 심사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소위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전체회의 의결에 필요한 심사보고 자료 작성과 자구 수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고동진 김성희 박정현 서범수 양부남 위성곤 이광희 이달희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 이세영

인사혁신처

차장 박용수

경찰청

차장 유재성

범죄예방대응국장 고평기

생활안전교통국장 한창훈

소방청

차장 이영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 송상교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 박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강동완

임시회의록